

www.kipf.re.kr

공공기관 Brief

2025 AUTUMN Vol. 20

기획특집
새정부와 공공기관

공공기관 박람회
소상공인 · 전통시장의 도약을 선도하는 든든한 평생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Brief』와 함께하세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는
공공기관 정책과 사례, 이슈를 바탕으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공기관 Brief』가 기관과 정부, 국민 간의 공감과 혁신, 소통의 장이 되길 희망합니다.

새정부 출범과 공공기관의 혁신 방향

새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은 새로운 기회와 과제를 동시에 부여받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구조적 저성장, 경제적 불확실성 등에 대응하는 재정의 역할 보완과 경제·사회 전반에 근본 변화를 불러올 디지털 전환, AI 같은 신기술 확산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 역할 주도 등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시민사회 성숙에 따른 윤리경영과 투명성의 강화, 글로벌 의제로서의 기후변화 대응, 국민과 산업현장의 안전 확보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들이다. 공공기관이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역할과 수행 방식에 대한 체계적·전략적 접근과 함께, 다음과 같은 혁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은 전통적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민간이 진입하기 어려운 분야를 보완하는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새정부는 이에 더하여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혁신(18번 국정과제)'과 '경제·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전략 핵심 과제 선정 및 보유 자원의 적극 활용'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은 본연의 임무와 성과에 대한 점검을 기반으로 역할을 재정 의하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부합하는 핵심 과제를 선정·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민간, 공공기관 등 관련 주체와의 협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지속가능경영 확립을 위한 ESG 경영의 내재화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신뢰와 장기적 경쟁력 확보에도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은 ESG 경영을 혁신과 포용적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고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와 투명성 향상을 도모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전략 통합부터 조직 문화 혁신, 이해관계자 참여, 데이터 기반 관리에 이르는 전략적이고 상호 연계된 관리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외 ESG 표준을 활용한 운영 및 성과의 외부 공시에 대한 관심과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전환 시대를 맞아 공공기관은 국민 삶의 질과 신뢰 제고, 민주적 책임성 및 윤리성 확보 등을 위해 혁신 기술을 활용한 진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즉, AI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성 향상, 비용 절감 외에 국민 신뢰 증진이라는 공적 가치 제고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AI 기반 예측 분석을 통한 미래 수요의 선제적 파악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사회 변화와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전략적·창의적 과제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AI 활용성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데이터 인프라 구축, 투명한 거버넌스 구축 등의 핵심 과제를 집중 추진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AI 도입이 초래할 편향과 불투명성 등 다양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공정성, 투명성, 인간의 통제권 존중을 근간으로 한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 및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새정부 출범과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위에서 제시한 노력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민첩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 회복과 사회적 가치 증진이라는 공적 가치를 실현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관별 특성과 역할에 맞춘 법·제도 정비, 거버넌스 및 경영평가제도 개편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이 체계적이고 연계된 정책 실행과 지속적 개선을 통해 정부 혁신의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과 사회가 신뢰하는 미래지향적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이남국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CONTENTS

공공기관 Brief

2025 AUTUMN Vol. 20

발행인 이 영 KIPF 원장
편집인 이남국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편집위원 변민정 KIPF 정책사업팀장
조혜진 KIPF 미디어커뮤니케이션팀장
제작지원 유승현, 강석훈, 김다현
외주지원 임영현
발행일 2025년 10월 31일
등록일 2020년 5월 13일(세종, 사00017)
디자인/제작 고려씨엔피

정기구독 안내

신청방법 우편, 전화, 이메일을 이용해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전 화 044-414-2457
이메일 soe@kipf.re.kr
주 소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6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구독료 권당 3,000원(1년 정기구독 5,000원)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우리은행 1005-103-961530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공공기관 Brief』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공공기관 Brief』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획특집



08 전문가VIEW I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에 부처
이민창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11 전문가VIEW II

공공부문 SI 도입·활용을 위한 국가 데이터 전략
- 'SI 엔진'의 연료 공급망 구축에 관하여 -
이현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중소·벤처기술혁신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15 전문가VIEW III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강화방안
-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
김경우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부 교수

18 Round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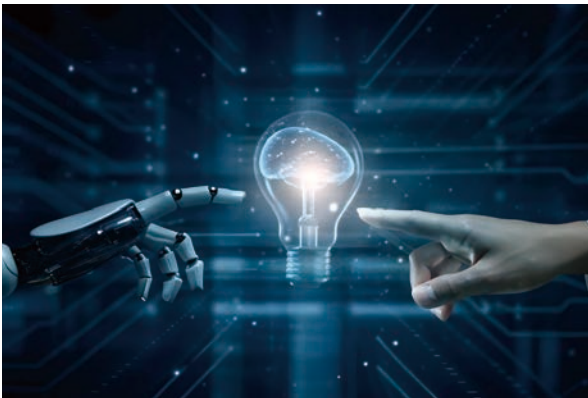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

**이번 「공공기관 Brief」
Vol. 20은 어떠셨나요?**

「공공기관 Brief」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번 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과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아쉬웠던 점 등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의견과 함께 성함, 연락처(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셔서 담당자 이메일(soe@kipf.re.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보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3만원)을 보내드립니다. 당첨된 독자분께는 보내주신 연락처를 통해 안내드립니다.



공공기관 NOW



공공기관 TALK



28 공공정책 동향
정책동향 소식

30 Trend Focus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 정부와 시장의 역할 -
이상엽 한국환경연구원 탄소중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34 글로벌리포트_공공기관 해외동향
글로벌 경제에서 주목받는 공기업: 주요국의 대표 공기업 현황
강석훈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44 글로벌리포트_공공기관 해외사업
인공지능(AI) 산업의 글로벌 동향과 전망
한국무역보험공사 조사부 산업정책조사팀

50 혁신이야기 I_한국가스안전공사
“국민에게 가스안전을 배송합니다”
가스안전 복지등기 사업

52 혁신이야기 II_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민간의 ‘초(超)격차’ 기술 혁신을 위한
첨단 인재 양성·사업화 지원

56 공공기관 박람회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도약을 선도하는
든든한 평생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김주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홍보실 과장

60 잡(JOB)담 I
한국철도공사
이원석 한국철도공사 인재경영본부 차장

64 잡(JOB)담 II
새만금개발공사
김강우 새만금개발공사 기획본부 인사노무팀 팀장

68 나의 취업성공기 I
39전 40기
박연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인증센터 대리

71 나의 취업성공기 II
신입사원이 미래 후배에게 전하는 작은 격려
박근원 한국마사회 승마활성화부 사원



기획특집

이번 <기획특집>에서는 새정부가 제시한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정부와 전문가, 공공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전문가VIEW’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개편 방향과 향후 과제,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도입·활용을 위한 국가 데이터 전략,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 등 전문가 의견을 소개한다. ‘Round Table’에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에 관해 전문가와 기관 의견을 들어본다.

전문가VIEW I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에 부처

전문가VIEW II

공공부문 AI 도입·활용을 위한 국가 데이터 전략
- ‘AI 엔진’의 연료 공급망 구축에 관하여 -

전문가VIEW III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강화방안
-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

Round Table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

PUB



UBLIC SECTOR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에 부쳐



이민창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도입 취지

공공기관의 성과관리 방식에는 정답이 없다.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공공서비스 제공 주체 및 방식의 구성과 변천 과정은 국가마다 다르고, 서비스 제공 조직의 구조와 성격도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통상 시장 특성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는 시장에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실패 영역에 해당하면 공기업을 통해 공급하고, 시장 특성이 없거나 약한 정부 정책사업 혹은 정책집행 성격의 재화나 서비스는 정부가 공공 비영리 조직을 설립해 공급한다. 현행 기준에서는 전자를 공기업, 후자를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한다.

이처럼 공기업은 설립 취지와 조직 특성상 주무 부처의 영향에서 더 독립적이고 경영 자율성의 정도가 높아야 한다. 특히, 상장 공기업은 상당 수준의 경영 자율성 보장과 함께 공공서비스 수요에 부응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한다. 반면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주무 부처의 정책형성 및 집행 과정에 더 밀접히 관련돼 있다. 이 기관들은 독립적 운영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추진 과정이 주무 부처와 연동되거나 예산 운영 시 정부의 지배적 관리를 받는 등 경영 자율성과 정책 독립성에 상대적 제약이 따른다.

경영평가 목표가 경영 효율성과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환류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공공기관 유형과 개별 기관 특성을 반영함이 맞다. 공기업 경영평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경영 효율성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과 성과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 기능이고,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부여된 사업의 충실한 수행과 목표 달성 여부 그리고 기관 운영 과정의 비효율 점검이 기본 기능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변화 과정

우리나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변화 과정에서도 그 취지를 반영한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 경영평가 역사는 효율성과 공적 사업 성과의 점검 및 환류를 수행하는 제도의 변천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최초인 1984년 경영평가 시행 시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10여 개 공통 계량지표와 기관별로 각기 달리 설계된 비계량지표가 적용됐다. 이 구조는 현재 경영관리 지표와 주요 사업 지표 구성 및 운영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으며, 정부 투자기관 사업의 공적 성격과 경영 효율성을 동시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공공성과 효율성의 진자운동’이라고 표현하는 이 가치들의 반영은 우리나라 경영평가제도 변화의 특징 중 하나이다. 시대적 환경에 따라 평가의 강조점이 다른데, 예를 들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모두 공공기관 개혁을 강조했지만 내용은 상당히 다르다. 전자는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구조조정과 IMF의 영향을 계량지표에 반영했지만, 후자는 경영평가와 별도의 혁신평가를 시행했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명목으로 하여 서민생활 안정, 공정사회 구현,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사회공헌 등을 지표로 운영했다. 또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합리화를 표방하면서 협업성과 가점율, 공공기관 정상화를 명목으로 부채·방만경영 관리를 지표에 반영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중요한 공공기관 정책과제로 채택해 관련 지표체계를 대폭 정비했다.

경영평가가 사실상 지표와 가중치를 통해 현장에서 구현되는 것임을 생각하면 이런 변화는 당연하다. 다만, 지표군의 변화는 다소 생각해 볼 점이 있다. 현행 경영관리 지표군은 주로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 정책 또는 정부가 공통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들을 반영하고, 주요 사업 지표는 공공기관 고유의 사업 목표들을 반영한다. 즉, 전자는 경영 효율성과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고, 후자는 기관 설립 근거 법령 그리고 주무 부처의 정책사업 목표와 더욱 깊은 관계가 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경영관리 지표는 기관의 자원 활용 방식과 비효율성을 점검하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 지표는 기관 본연의 서비스 공급 수준을 점검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평가군 분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2013년까지만 해도 3개의 지표군이 운영됐고, 평가지표 변천 과정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 관련 지표가 추가되거나 가중치가 조정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정부 정책 노력을 반영한 지표를, 이명박 정부는 정부 권장 정책 지표를 운영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부채 과다 중점관리 대상 기관과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시행했으며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가치 지표를 통해 일자리 창출, 안전, 환경, 지역발전 등을 점검한 바 있다.

요컨대 경영평가제도는 정부가 효율성을 중시하는지, 공공성을 강조하는지에 따라 지표와 가중치 구성을 달리하여 변화했으며 이는 정부 성격 혹은 국정운영 철학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새정부 정책 방향과 향후 경영평가제도 운영 과제

현재까지 확인된 새정부의 공공기관 관련 정책을 정리해 보면 크게 공공기관 역할 확대와 공공기관 관리 거버넌스의 변화 그리고 공공기관 기능 조정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경영평가와 직접 관련된 영향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장 평가 신설의 영향이다. 기관장 평가 도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한 바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 차등 지급과 해임 건의,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입되는 기관장 평가는 임기 일치 문제 등과 함께 쟁점이 되고 있으며, 평가 주기, 평가 수행 단위, 평가지표, 기관장 평가와 기관 경영 성과의 연계성, 평가 결과 활용 등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다.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이니만큼, 제도 운영의 원칙부터 시행까지 기존에 발견한 장단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지표체계 변화의 영향이다. 지표체계 정비에는 정부 정책 지표 반영 여부 및 구성 방법, 평가지표군 조정, 개별 기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지표의 설계와 시행 등이 필요하다. 특히, 점검으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은 삭제하거나 공시로 변환해 상시 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경영평가는 기관 역량 강화와 함께 컨설팅이 필요한 분야를 중점으로 운영해서 기관의 평가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맞춤형 컨설팅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주요 사업 분야에서도 법령과 정관 그리고 주무 부처의 주요 사업이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표 다변화와 가중치 조정을 포함한 성과 측정 방법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평가 결과 활용에 대한 영향이다. 경영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 개선에 활용함이 원칙이다. 경영평가에 대한 관심이 기관 등급과 성과급 지급에 편중되지 않고, 경영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 보고서 구성, 평가 결과의 정리와 활용 방안 제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보고서가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 그리고 기관의 가치 창출에 유용하도록 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경영평가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원칙은 경영평가제도가 본래의 목표와 기능에 충실하게 설계돼야 한다는 점이다. 부처가 다양한 공공기관 관리 수단을 활

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점검 장치들을 경영 평가지표에 반영해 운영하는 방식은 평가제도를 표류하게 할 위험이 있다. 경영평가로 '모든' 부처의 '모든' 정책 관리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인 만큼, 경영평가는 소유권 부처의 효율성 점검, 정관과 규정에 적시된 주요 사업 수행 그리고 주무 부처의 정책과 잘 조율된 성과 확인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설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공공부문 AI 도입·활용을 위한 국가 데이터 전략

- 'AI 엔진'의 연료 공급망 구축에 관하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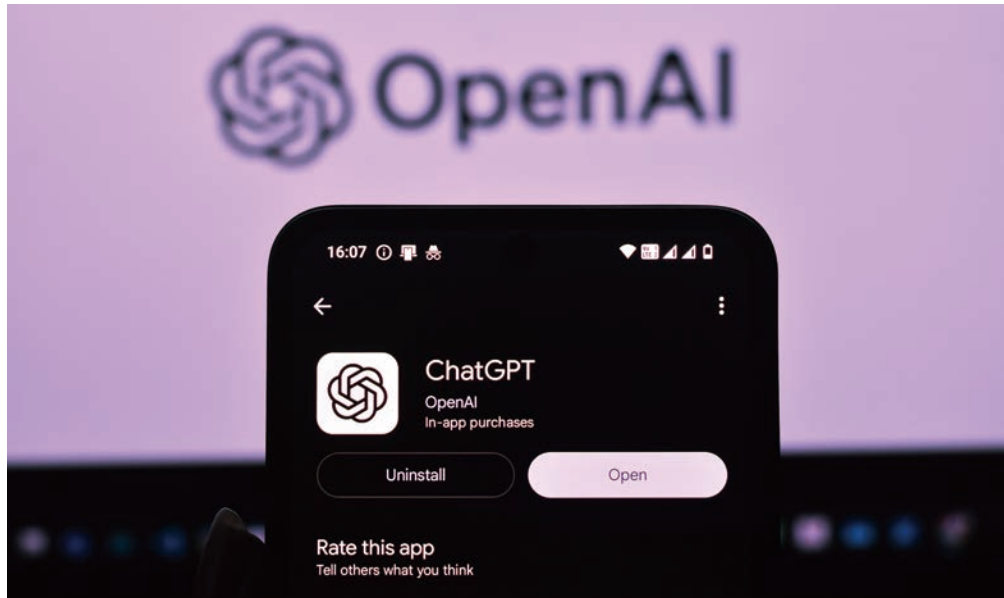
이현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중소·
벤처기술혁신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인공지능(AI)에 관한 상업적 욕망과 국가적 야망은 언제나, 인류가 축적해 온 정보의 총량을 앞섰고, 연산력을 증가했으며, 알고리즘의 성능을 압도해 왔다. 1955년 AI에 관한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제안된 이래 지난 70년간 반복되어 온 이 패턴은 오래된 가능성과 익숙한 희망으로 점철된 인공지능의 역사가 만들어진 ‘실패의 본질’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견고한 믿음이 아직 남아있다면, 이는 그간의 무수한 시도와 좌절 속에서 마침내 우리가 이 기술의 명확한 한계를 깨닫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기술만으로 꿈꿀 수 없는 AI 유토피아

2017년 7월 8일, 중국 국무원이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 계획(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的通知)’을 발표했다. 뒤이어 2019년 2월, 백악관은 행정명령 13859호를 통해 미국의 ‘AI 이니셔티브’를 수립했다. 이후에 벌어진 미·중 전략경쟁은 인공지능을 확실한 국가적 어젠다로 만들었다.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적인 AI 과열 양상은 계획적인 국가 전략이 촉발한 것이라고만 보기 어렵다.



2022년 OpenAI사의 챗GPT-3 등장은 AI 기술이 글로벌 어젠다가 된 변혁적 사건이었다. 이후 AI 유토피아를 꿈꾸는 현란한 전망은 미국 내 주식시장 가치를 21조달러(한화 3경원)나 상승시켰고, 지난 1년간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의 40%를 견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2028년 말까지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투자되는 금액이 3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이 이처럼 뜨거워진 배경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경제를 변혁할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 가장 급진적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인공일반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의 도래로 연간 20%에 달하는 폭발적인 경제 성장이 이뤄지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한다. 그리고 이 같은 전망에는 AI에 대한 기술적 낙관주의가 자리한다.

AI 성능은 무어의 법칙(Moore's Law)이 설명하는 지수적 진보 속도에 더해, 알고리즘 및 아키텍처 개선과 컴퓨팅 자원 증가가 각각 연간 3배와 4.6배의 속도로 발전을 가속화함에 따라 연간 13.8배씩 개선되고 있다. 그렇기에 인간이 생성한 훈련 데이터의 양은 조만간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28년 말 AI의 성능은 2025년 초에 비해 3만 6,000배 이상 우수할 것으로 예견된다. 하지만 시장과 정부가 희구하는 AI 유토피아는 최상급 성능의 칩과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라는 기술력만으로 담보될 수 없다.

임박한 데이터 절벽의 현실

AI 발전은 ① 데이터, ② 컴퓨팅, ③ 알고리즘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에 달려 있다. 오늘날 AI 관련 기업과 국가의 관심은 대부분 '하드웨어(컴퓨팅)'와 '소프트웨어(알고리즘)'에 쏠

려 있지만, 이 기술의 핵심은 ‘데이터’에 있다.

2006년 당시 일리노이대학교 소속이었던 페이페이 리(Fei-fei Li) 교수가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를 채굴하는 것이 AI 연구를 혁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그녀는 온라인에 존재하는 수십억 장의 이미지를 분류해 방대한 AI 시각 훈련 자료를 확보했는데, 그 결과로 ‘이미지넷(ImageNet)’이 탄생했다.

2012년 알렉스 크리제브스키(Alex Krizhevsky)와 일리야 수츠케버(Ilya Sutskever)가 제프리 힌턴(Geoffrey Everest Hinton) 교수의 지도를 받아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2장으로 구현한 ‘알렉스넷(AlexNet)’이라는 프로그램은 ‘딥러닝’에 ‘이미지넷’을 활용함으로써 AI 기술의 놀라운 가능성을 증명해 냈다. 방식은 다르지만, 대규모 언어모델(LLM)도 막대한 데이터에 의존해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했다. 500억 개의 웹 페이지를 포함하여 인터넷상에 공개된 대부분의 텍스트 정보를 아카이브한 ‘커먼 크롤(Common Crawl)’은 초기 LLM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며, 현재 최신 LLM 모델들은 수천 권의 저서를 모아놓은 ‘북스3(Books3)’ 같은 데이터를 활용한다. 훈련용 텍스트가 많을수록 알고리즘 성능이 향상된다는 LLM 법칙은 인터넷이 제공하는 수백조 단위의 텍스트를 ‘연료화’하며 ‘AI 엔진’을 가동해 왔다.

그러나 데이터에 대한 ‘AI 엔진’의 욕구는 ‘디지털 아카이브화’가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2028년까지 인터넷상의 고품질 텍스트 데이터가 모두 소진될 것으로 추정한다. 업계는 이를 ‘데이터 절벽(data wall)’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벽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앞으로의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있어 중대한 도전이자 과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공공의 역할이 있다.

공공데이터 장벽에 가로막힌 AI의 미래

모델 학습용 데이터 시장에 주목한 스케일AI사의 공동창업자 알렉산더 왕(Alexandr Wang)은 종종 지나칠 정도로 간과되는 데이터의 중요성에 관해 미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중국 공산당은 AI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거대한 규모의 공공데이터 정보를 개방해 AI 시스템에 연료를 공급하는 전략으로 미국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생산자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와 표준화 미비로 말미암아 현재 대부분의 공공데이터가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과의 AI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AI 데이터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최근 발간한 ‘AI



산업 전환을 위한 데이터 전략 보고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적나라하게 짚어내고 있다.

AI 역량 6위, 운영환경 35위.

대한민국 AI 생태계의 열악한 운영환경은 '그림의 떡'인 공공데이터 활용 실태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개인정보 비식별화의 불완전성, 저작권 검증 부담, 기관 간 데이터 공유의 한계와 표준화 미비, 데이터 처리 비용의 부담 등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방치를 장려하는 제도와 규제의 그늘은 AI 생태계 전반에 걸쳐 길고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표준화되지 않고 기관별로 흩어진 데이터는 'AI 엔진'의 연료 비용 상승으로 이어졌고, 대부분 외부 반출을 금지하는 통제는 사업 시작 단계에서 발목을 잡았다. 원칙 중심으로 구성된 '데이터 활용 가이드 라인'은 개별 사례 적용에 있어 '보수적 접근'이라는 '불확실성 최소화'의 원칙'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뿐이었다.

‘국가적 어젠다’ AI와 공공의 역할

공공에 AI 모델을 적용하려는 계획은 대국민 서비스의 정밀도를 크게 향상해 국민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높일 수 있다. 또한 AI 기술은 인프라 시설과 사회 안전 운영의 주요 상황을 정확히 감지·예측·조기 경보해 재난·안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실현 가능케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시도는 공공데이터의 통합 운영에서 출발한다.

그간 공공 분야에 IT 기술을 도입해 행정 서비스를 효율화하려는 도전은 오래된 가능성에서 기인한 익숙한 희망에 불과했다. 지난 20여 년간의 부단한 노력으로 전자정부를 현실화했으나, 내용상 오프라인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일정 수준 이상의 오래된 정보를 완전히 디지털화하지도 못했다. 그러는 사이에 마치 개항을 강요하는 군함의 모습으로 나타난 AI 시대정신은 국가 데이터 문호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 인공지능 전략의 최우선 안건은 데이터에 있어야 한다. 공공부문은 이 전략의 최전방에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조치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첫째, 국가 AI 데이터 저장소를 설치해 정부·공공 AI 도입의 허브 역할을 맡는 동시에, 데이터 저장, 변환, 공유를 총괄함으로써 광범위한 공공영역에 AI 연료를 공급해야 한다. 둘째, 공공영역이 보유한 모든 데이터를 AI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유통, 활용하는 공공 AI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데이터가 국가 AI 전략의 최우선 순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있도록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드웨어(컴퓨팅)'와 '소프트웨어(알고리즘)'의 관점으로 볼 때,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구축한 AI 인프라 성능은 4년 후, 3만 6,000분의 1로 뒤떨어진 게 된다. 반면 데이터는 감가상각이 필요 없는 영구자산이다. 국가가 투자를 주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강화방안

-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



김경우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부 교수

재난안전관리의 중요성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추모 글귀가 어느 공공기관 본사 현관에 붙어있다.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지는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처럼, 국가의 주요한 사회적 기반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법령상으로도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지는 기관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범위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동법 제3조 제5호).¹⁾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서도 공공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를 규정한다(제3조). 공공기관은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기관의 규모·업종, 안전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필요한 안전 인력을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제7조). 공공기관은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 단계에서 안전 관련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전보 제한 기간 설정, 전문교육 이수 등 안전 분야 근로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제8조 제1항). 또한 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의 안전 관련 근무 경력, 전문성, 성과 등을 근무평정, 성과 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이처럼 법령과 지침은 공공기관의 재난안전관리에서 책무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법령과 지침에서 의도한 바대로 공공기관이 재난안전관리와 관련 사회적·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어떻게 향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개념을 개략적으로 고찰하고, 재난관리 인력이 갖춰야 할 전문성, 그리고 공공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할 방안을 제시한다.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재난안전관리는 재난관리와 안전관리를 합쳐 놓은 용어이다. 학자마다 정의하는 바는 다르겠지만, 규모 면에서 재난관리가 지역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큰 사건에 대처하는 활동이

1)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인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부속기관을 포함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

그림 1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구성요소



자료: 윤건 · 류충렬(2014), p. 220 <표 5-41>; 최호진 · 김경우(2020), p. 39 <표 2-7>

라면, 안전관리는 작업장이나 시설에 피해가 제한되는 사건에 대처하는 활동이다. 공공기관은 소규모 안전사고에 대처할 때 주로 안전관리를 수행하겠지만,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 재난으로 손상이 발생했을 때, 시설 자체의 오작동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직원과 주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재난관리와 안전관리의 공통적인 속성을 고려할 때, 재난안전관리는 재난, 안전사고에서 인적·물적 피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그 규모를 줄이기 위한 활동이며,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은 재난안전관리 인력이 이러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문제 분석 및 해결 능력이다. 이 글은 공공기관 재난안전관리 인력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으로 전문지식 및 기술, 경험, 협력 및 소통, 조정, 윤리 규범 준수 등을 제시한다.²⁾ 이러한 구성요소 중 현직자들은 경험, 전문지식 및 기술, 협력 및 소통, 조정 및 통합능력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전문성 강화 방안

공공기관은 조직의 재난안전관리 담당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용 · 배치, 성과 관리, 교육 · 훈련, 경력 개발, 리더십과 조직문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채용과 배치 측면에서 공공기관은 조직의 안전관리를 담당할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 관련 학위나 자격증을 갖춘 인력의 채용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관련 경험이 있는 직원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 기존 직원들의 경우, 안전관리 관련 직무에 오래 근무하도록 해 직무상 기술을 익히고, 경험을 쌓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2) 윤건 · 류충렬, 『재난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역량강화 및 관리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4.; 최호진 · 김경우,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강화방안 연구: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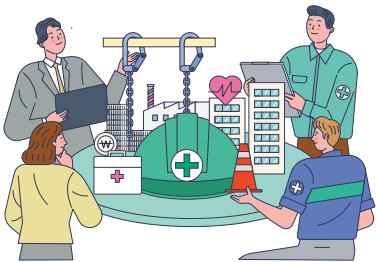
둘째, 안전관리 부서 조직의 업무 강도와 난이도를 고려한 성과 보상이 필요하다. 재난안전관리 업무는 강한 책임감과 비상근무 등이 요구됨에도 그에 상응하는 금전·비금전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안전관리 부서 배치를 기피하고, 배치되더라도 오래 근무하고자 하지 않는다. 결국 직원들은 자신들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전문성을 개발하려는 노력도 소홀하게 된다.

셋째, 직원 맞춤형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재난안전관리 관련 일반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신규 입사자와 기존 직원, 실무자와 관리자, 공공기관과 밀접한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은 담당 직원이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담당 직원의 교육·훈련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와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배점이나 가점을 부여할 수도 있다.

넷째,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협력·소통 등 총체적인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보직 경로 설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보 제한 기한 설정은 안전관리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안전 분야의 기술과 경험을 쌓을 기회도 제공하지만, 제한 기한이 오래되면 담당 인력의 협력·소통 능력이 오히려 저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순환 배치를 통해 안전관리 부서 직무뿐만 아니라 타 부서 직무 경험을 쌓아서 기관 내의 네트워크와 협업 능력 향상을 꾀해야 한다.

다섯째, 기관장의 관심과 조직문화는 공공기관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 기관장의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은 위에서 제시한 제도적 개선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기관장의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함께 조직 전체의 재난안전관리 중요성 인식을 향상하기 위해서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기관장과 전 직원 대상 교육의 의무화를 통해 안전관리 부서가 주관 부서이지 전체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지 않으며 모든 직원이 조직의 안전을 위해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기관장의 관심은 안전관리 부서 직원들의 직무만족을 높이는 데 유의하다.³⁾

요컨대, 공공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재난안전관리는 재난 및 안전사고에 인적·물적 피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그 규모를 줄이기 위한 활동이며,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은 재난안전관리 인력이 이러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문제 분석 및 해결 능력이다. 이러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채용·배치, 성과 관리, 교육·훈련, 경력 개발, 리더십과 조직문화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김경우·최호진·유정모·차진영,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제18권 제1호, 2023, pp. 1~27.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



이남국 우리나라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역대 정부마다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예컨대, 1970년대에는 울산, 광양, 포항 등 산업단지 조성, 노무현 정부에서는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 세종시 건설, 이명박 정부에서는 광역경제권 전략, 그리고 최근의 초광역 협력(메가시티) 구상 등 다양한 접근이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러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 전반이 어떠한 성과와 한계를 보여왔는지 전문가 시각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태만 먼저, 과거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 울산, 광양, 포항 등지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국가 성장 동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제조업 기반이 확립되고, 고용 창출과 도시 성장, 수출 산업 육성이 가능해졌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정책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 지역에서는 인구와 산업, 교육 인프라가 일정 부분 활성화됐습니다. 아울러, 세종시 건설은 행정수도의 보완 기능을 수행하면서 수도권과 충청권의 불균형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전략은 지역 간 칸막이를 넘어 권역 단위로 성장 전략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초광역 협력, 이른바 메가시티 구상은 단일 도시 경쟁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권역 단위 도시권 형성을 목표로 하며 국가 균형발전 담론을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첫째, 수도권 집중 완화에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정책



일자

2025년 10월 2일(목)

방식

온라인 화상회의

사회

이남국

토론자

김태만, 서재호, 이정행, 장형탁

정리

유승현, 김다현

Round Table 원고 내용은 참석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및 각 참석자 소속 기관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적 노력이 있었음에도 수도권인 인구와 산업 집중은 심화했고, GDP와 R&D 투자, 대학과 기업 본사는 여전히 수도권에 압도적으로 몰려있습니다. 둘째, 이전 효과 중 하나인 지역 정착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전했지만, 인력과 산업, 생태계가 함께 옮겨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에서는 공공기관 직원 상당수가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교육·문화·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특별한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정주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 정책의 단절성 문제도 컸습니다. 각 정부가 혁신도시, 기업도시, 광역경제권, 메가시티 등 새로운 브랜드를 내세웠지만, 일관성과 지속성이 부족해 성과의 축적보다는 단절이 반복됐습니다. 넷째, 지역별 격차가 고착됐습니다. 세종시 같은 일부 지역은 산업단지 등으로 혜택을받았지만, 다른 지역은 소외되면서 균형발전이 아니라 격차 확대라는 역설적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서재호 인구 성장기 사회적 복잡성과 연결성이 높지 않을 때 중앙정부가 추진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한 울산이나 광양, 포항은 중공업단지 조성을 토대로 인구 유입과 함께 도시 인프라를 형성하면서 상당한 성공을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이들 도시의 인구성장, 지역 내총생산(GRDP)만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구소멸과 인구구조 변화를 맞이하면서 추진한 혁신도시 등 일부 균형발전 사업은 다양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활용한 혁신도시 사업은 일부의 경우 지역과 융합하지 못하는 혁신도시, 국내 기러기를 양산해 가족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등 문제를 보입니다. 특히 혁신도시에 부족한 도시 인프라는 균형발전의 수단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이 의도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직업과 직장,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의미가 크게 달라진 현대사회에서 국가 정책으로 회사를 강제로 이전해 신도시를 만드는 접근이 지닌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남국 앞서 말씀해 주신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다양한 사례와 성과·한계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과거 정책들과 비교해 어떤 점에서 차별화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이 과정에서 부산에 있는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서재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최근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몇 가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정책적으로 부산이라는 공간이 우리나라 해양수산 정책에서 차지한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기존 혁신도시 정책으로 지방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과 연계성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주요 정책 대상인 해양 및 수산과 중앙행정기관이 매우 가깝게 된다는 점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해양수산부와 함께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정책 결정과 집행 간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 정책의 발전은 결국 해양수산 도시로서 위축되던 부산시의 성장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도시 인프라를 살펴봤을 때 부산은 최근에 진행된 혁신도시가 갖지 못한 도시 인프라를 완벽하게 갖춘 도시라는 점에서 성공 가능성이 큽니다. 해양수산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은 이주할 직원의 생활 수준이 저하되지 않으면서, 이주하는 직원과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 서비스 수요를 창출해 부산시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넷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등 해운과 수산에 특화된 고등 교육기관과 해양수산 정책과의 연계성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 간에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안심하고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조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이전 공공기관은 기관 사업이 지역의 산업 수요와 일자리를 창출로 이어져 산업 연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김태만 먼저, 차별화 요소입니다. 과거 세종시 이전이 ‘행정 기능 분산형’이고, 혁신도시가 ‘기관 분산형’이었다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부처-산업-도시가 한 점에서 만나는 ‘도메인 집적형’ 이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부산에는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함께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같은 관련 교육기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항만과 해운 기업, 금융기관과 교육·연구 기관이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정책과 현장의 연결 비용을 크게 줄이고, 정책 실험과 적용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이번 이전은 ‘선거용 공약’을 넘어 실행이 가시화된 사례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가속해 2025년 7월에 이미 부산 동구 IM빌딩과 협성타워를 청사로 확정했고, 연내 이전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발표와 정부·지자체 계획이 구체화하면서 타임라인에 매우 높은 신뢰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비전은 거창하지만 실행은 더딘’ 패턴과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셋째, 이번 이전은 단순한 기관 이동이 아니라 특별법과 정책 패키지가 결합한 이전입니다. 국회에서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2025. 8. 12.)되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단순히 사무실만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재정·인력·정주 여건·산업 정책까지 한 묶음으로 다루려는 점에서 과거와 많이 다릅니다.

중요한 부분은 부산 입지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① 해양수산부 본부는 ‘녹색해운·디지털포트·북극항로·수산자원 회복’이라는 미션을 주도하고, 규제와 제도를 설계하며, 장관 직속 PMO를 통해 권역별 거버넌스를 총괄할 계획입니다. ② 부산항만공사는 스마트·그린 포트를 실행하는 허브로, 항만 전동



이남국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김태만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



서재도
국립부경대학교
행정복지학과 교수



이정행
신선대감만터미널(주)
대표이사



장형탁
부산항만공사
기획조정실장

화와 데이터 기반 운영 규약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③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녹색선박 전환펀드와 금융 지원을 통해 선사의 부담을 줄이고, 해운 사이클 완충 장치 역할을 해야 합니다. ④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R&D와 실증을 담당하며, 블루카본과 자율운항 같은 혁신 기술을 검증합니다. 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운임, 연료, 탄소가격, 항로 위험을 관측하고 정책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를 운영해야 합니다. ⑥ 국립한국해양대학교와 국립해양박물관 등은 인재 양성과 해양문화 확산의 참여형 거점이 되고, ⑦ 부산시와 시의회는 법과 재정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개월 실행 의제(어젠다)와 핵심성과지표(KPI)도 구체적입니다. 3개월 안에 PMO를 설치하고, 고위 간부의 상주화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미 시작했습니다. 6개월 내에는 특별법을 처리하고 생활 인프라 패키지를 가동할 것입니다. 청사 입주와 데이터 허브 오픈도 같은 시기에 이루어져야 하고, 12개월 내에는 녹색선박 금융 지원이 실제 집행되고,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5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양성될 것입니다. 결국 이번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단순한 ‘공간 분산 이전’을 넘어 ‘생태계를 내장한 이전’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별성입니다. 이를 특별법과 데이터 인프라, 금융 패키지로 고정한다면, 부산은 해양 수도권으로 자리매김하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해양 국가로 도약할 확실한 발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남국 이번에는 부산에 있는 항만 관련 공공기관과 해상 종합물류서비스(항만하역, 화물적출입, 컨테이너 보관 및 유지보수)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부산 지역 경제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또한 기관과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우려와 기대를 하는지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정행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지역 경제와 산업계 전반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무엇보다 정책 결정의 중심이 수도권에서 현장인 부산으로 옮겨온다는 점에서, 지역 산업계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 빠르고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가 큼니다. 항만·해운·수산·조선·관광 등 연관 산업이 더욱 긴밀히 연결되면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부산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 판단합니다. 또한 이번 이전은 지역 인재 육성의 기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 청년들에게 공공기관 취업과 연계 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열리고, 지역 대학·연구 기관과의 협업이 강화되면서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해양금융, 선박보험, 해양 ICT 등 신산업 분야까지 부산을 중심으로 한 발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큼니다.

반면에 이전이 단순히 건물과 인력 이동에 머물 경우, 행정 비효율이나 지역 편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전국의 항만·수산 도시들이 소외감을 가질 우려도 있습니다.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규제와 행정 절차의 복잡성이 현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항만운영사 입장에서는 스마트 항만, 친환경 물류 등 민간기업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 공공기관과 협력할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부산 편중이 아닌 전국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주요 항만 도시가 함께 발전한다면,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형탁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단순히 하나의 정부 부처 이전을 넘어, 인구 감소와 지역기업 역외 이전으로 인한 산업계 침체 등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부산 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통계청 ‘2024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부산 총인구는 325만명입니다. 1995년 388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난 후 매년 평균 약 2만명 이상이 감소해 왔다고 나타나고 있으며, 부산의 지난해 중위연령(총인구를 나이 순서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도 48.9세로 8대 특별·광역시 중 가장 높아 고령화 속도가 우리나라 대도시 중 가장 빠른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과 함께 최근 언론이 수도권 소재 해양수산 공공기관들의 동반 이전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부산 지역 청년의 역외 유출과 인구 감소세를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 해양산업계, 특히 항만, 해운, 물류, 수산업계 전반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이남국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해 기관 간 협업이나 부산 지역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향후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 필요한 과제나 계획이 있다면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형탁 부산항 개발·관리·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부산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4년 설립한 저희 부산항만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해운항만물류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긴밀한 소통,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연내에 부산으로 이전하는 임시청사의 위치가 우리 공사와는 지하철로 세 정거장 거리에 불과해 물리적 거리가 매우 가까워지는 만큼 해양수산부와 우리 공사 임직원 간 현장 밀착형 업무 협업이 더욱 기민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협력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부산항과 부산 지역 경제의 도약과 미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는데요, 해양수산부 이전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의 새로운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정행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 지역 경제와 공공기관 간의 협업에서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책 결정이 현장 가까이에서 이뤄지면서 항만 운영, 물류, 수산, 조선, 관광 등 주요 산업이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연계될 수 있고, 이는 부산항을 글로벌 해양 물류·비즈니스 허브로 도약시키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특히 터미널 운영사와 같은 민간기업은 해양수산부와 직접 협력해 스마트 항만 구축, 친환경 물류체계 도입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학과 연구기관, 항만공사와 협력해서 스마트 항만 기술, 친환경 연료, 자율운항 장비 같은 미래 지향적 R&D를 공동 추진한다면 부산은 혁신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민간이 항만 데이터를 공유·활용한다면 물류 최적화, 안전관리, ESG 경영 강화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해외 항만·해운 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부산이 국제 해양 콘퍼런스와 글로벌 물류 전시회, 해양금융 포럼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향후 과제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규제 혁신, 항만 데이터 개방, 해양경제 특구 지정 등이 뒷받침되어야 시너지 효과가 실제 성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 중심의 발전을 넘어 각 지역이 특화된 역할을 맡고 해양수산부가 이를 조율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면 전국적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저희 신선대감만터미널 역시 해양수산부와 긴밀한 협력 속에서 스마트화, 친환경화, 글로벌화를 선도해 부산항이 동북아 해양 수도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국 마지막으로, 앞서 논의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향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지, 각 기관과 전문가 관점에서 이번 사례를 통해 얻은 시사점이나 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이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만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논의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향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논의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 왔습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노무현 정부 시기의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과 세종시 추진,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전략, 최근의 초광역 협력, 이른바 메가시티 구상에 이르기까지 여러 모델이 제시됐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분명 지역 인프라 확충과 일정한 성장 기반 마련이라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 집중 현상은 완화되지 않았고, 이전기관의 정주성도 낮았으며, 정권 교체 때마다 정책이 단절되는 한계 또한 분명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과거와 다른 차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간을 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부산에 집적된 항만·해운·연구·금융 생태계와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루게 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정책-산업-연구-시민’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데이터를 보고 움직이는 ‘도메인 집적형 이전’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해수부 부산 이전은 균형발전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해양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제도·재정적 지원으로 정주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고, 이전기관들은 현장에서 산업과 연구, 교육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성과를 분석·평가하며 개선안을 제시하고, 지역사회는 기관과 함께 정주 여건과 문화 기반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결국 이번 사례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이전’의 출발점이 되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재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지점은 이러한 모든 것이 사람의 선택과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결정한 배경에는 기업과 국민이 지방 대신 수도권을 선택한 데서 비롯됩니다. 대다수 기업과 국민이 수도권을 선택한 데서 기인한 문제를 정치적 또는 정무적으로 결정해 지방을 강제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 국가 균형발전의 기초인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균형발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마중물로, 기업과 국민이 수도권을 선택한 근거(혹은 이유)를 지방에서 찾을 수 있게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 설계 시 개인의 합리적 선택 구조를 고려하도록 조언합니다.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게임의 규칙으로서 제도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포함해 향후 논의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또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행 해수부 부산 이전 사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단순한 행정 기능 분산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향후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과밀 해소 차원을 넘어, 각 지역의 산업 특성과 연계해 국가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 산업 전략과 연

계된 비전 제시가 필요합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이 국가 해양수산 대전략과 맞물려 글로벌 해양수산 초강대국을 지향하는 것처럼, 앞으로의 이전도 해당 지역의 특화 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규제 혁신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제도 개선 없이 물리적 이전만 이뤄진다면 성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개방, 자유무역 확대, 신산업 지원 법안과 같은 장치가 마련되어야 이전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권 교체나 행정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장기적인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전국 상생의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특정 지역에 기관이 이전하더라도, 그 효과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권역별 앵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역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지역 주민 생활, 교통, 주거 환경 개선과도 맞물려야 진정한 균형발전의 성과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합니다. 대통령 직속의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부처 협업, 규제 개혁, 지역 상생 프로그램 총괄하는 강력한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 참여를 촉진할 인센티브 제도를 병행한다면 정책 효과는 한층 더 커질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중요한 변화입니다. 저희 운영사 역시 부산항만과 함께 국가 해양수산 발전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며, 향후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장형탁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적인 과업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간 서울 중심 수도권 일극 체제가 가져온 우리 사회의 불평등, 과밀화, 양극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는 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NOW

〈공공기관 NOW〉는 최근 쟁점이 되는 국내외 동향 및 기관 사례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과 변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공한다. '공공정책 동향'에서는 공공기관 정책 관련 보도자료와 현안을 다루며, 'Trend Focus'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관해 들어본다. '글로벌리포트'에서는 현재 글로벌 경제에서 공기업이 갖는 위상과 주요국의 대표 공기업 현황을 살펴보고, AI산업의 글로벌 동향과 전망에 대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조사한 결과를 살펴본다. '혁신이야기'에서는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의 고민과 노력, 성과를 우수사례로 다뤘다. 이번 호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안전 복지등기 사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첨단 인재 양성·기술 사업화 지원 사례를 소개한다.

공공정책 동향

정책동향 소식

Trend Focus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 정부와 시장의 역할 -

글로벌리포트_공공기관 해외동향

글로벌 경제에서 주목받는 공기업:
주요국의 대표 공기업 현황

글로벌리포트_공공기관 해외사업

인공지능(AI) 산업의 글로벌 동향과 전망

혁신이야기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책동향 소식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 의결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20일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개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2023년 말 확정된 경영평가 편람에 따라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4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재무실적·생산성 등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사회적 책임 등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했습니다. 또한 물가·주거 안정, 투자 확대 등 정부 정책을 적극 이행한 기관에는 가점을 부여했습니다. 평가 결과, 탁월(S) 기관은 없으며 우수(A) 기관은 15개, 미흡 이하(D·E) 기관은 13개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사업 성과가 뛰어나거나 재무실적 등 경영관리가 우수한 기관, 물가안정 및 국민경제 활성화 기여 등 정부 정책을 적극 수행한 기관이 우수(A) 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주요 사업 성과와 경영관리가 부진한 기관들은 미흡 이하(D·E) 등급을 받았습니다. 평가 결과 종합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에는 기관 유형과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됩니다. 최종 등급이 2년 연속 미흡(D)인 기관에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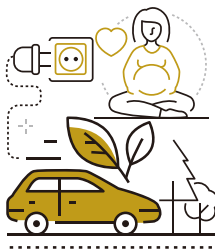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공운위 위원들은 공공기관 산재 사망사고 현황과 원인,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추진 예정인 다양한 정책을 보고받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날 보고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공기관의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안전경영을 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안전경영 원칙을 위반해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합니다. 둘째, 안전 관련 경영평가를 대폭 강화합니다. 기관장의 안전경영 책임을 평가 주요 사항으로 반영하고,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 중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합니다. 또한 안전 가점을 신설해 안전관리가 우수한 기관에 적극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셋째, 안전관리등급 심사제를 안전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산재 예방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사 대상을 확대·조정합니다. 심사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현재 73개 → 104개)



하고, 공공기관 사고사망자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건설 현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하도록 관련 지표의 배점을 상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연 1회 공시하던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분기별로 공시하는 등 안전 관련 경영공시를 강화하고, 2인 1조 위험 작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지능형 CCTV, 드론, AI 등을 현장에 적극 도입·확산해 위험은 낮추고 효율은 높이는 한편,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들의 안전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상·하반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한 이번 방안은 ① 사회적 배려 확대, ② 생활편의 제고, ③ 서류·절차 간소화, ④ 교통·여가 편의 증진, ⑤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경제활동 지원 5개 분야에서 총 33건의 개선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공기관 간 데이터 연계와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과제가 포함된 점이 특징입니다.

주요 개선 과제를 살펴보면, 전기 사용 중에 발생하는 고장 시 응급조치를 해주는 '전기안전 119' 서비스를 임산부,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무료로 전자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평일에만 가능했던 학자금대출 신청을 주말과 공휴일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교통 편의와 여가 편의 증진을 위해 기차 탑승 후에도 '코레일톡' 앱을 통해 좌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주유소에는 '내일의 가격'을 미리 표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도 국립공원 명소를 즐길 수 있도록 탐방 차량을 지원하고, 우리 강 자전거 종주 길을 달리기까지 가능한 테마형 멀티 트랙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번 서비스 개선은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임산부와 다자녀 가구, 프리랜서, 학생,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의와 안전망을 제공하며, 나아가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도 높이고자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번 과제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지원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주기적인 성과 점검을 통해 이행 상황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제안 플랫폼(서비스알리오) 등을 통해 새로운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AI 같은 디지털 분야 개선 과제 추가 발굴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국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체감도를 높이는 서비스 혁신을 지속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 정부와 시장의 역할 -



이상엽
한국환경연구원
탄소중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탄소중립 또는 넷제로(Net-Zero)는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배출량-흡수량·포집량=0)를 의미한다. UN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에 따라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각국이 장기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하면서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탄소중립은 이미 전 세계 주요국들의 핵심 국가과제로 설정되어 이행 중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도 관련 사항은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의 국정목표하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주요 추진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

탄소중립 대응의 본질적 의미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기후변화 위기 극복이다. 지난 100여 년간 우리나라의 평균온도는 지구 평균(0.8~1.2℃)보다 높이 상승(1.8℃)했다. 이와 함께 집중 호우에 적응하고 대비해야 한다.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저탄소사회 선진 경제구조로 전환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에너지·기후정책의 프레임을 재확립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이번 정부가 제시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은 위 두 가지 핵심 사안을 명확히 정조준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은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들에서도 핵심 국정과제로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기후위기 대

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¹⁾을 제정(2021. 9.)하고,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등 세부 전략을 추진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에너지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의 실현 가능성 강화, 에너지 수급을 위한 전력시장 원리 적용 강화, 시장원리 기반 혁신기술 사업화 및 에너지 신산업 창출에 중점을 둔 주요 대책을 추진하고자 했다.

국가 탄소중립을 위한 국정계획이 본격 이행하면서 그 실적을 평가하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특히,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내 국정과제 간 그리고 국제적 여건과의 상호연계적 관점이 중요하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부동산·연금, 먹거리 경제구조, 사회적 갈등 등 다양한 사회 과제가 공존한다. 탄소중립 문제는 이 같은 요소들과 대체적, 보완적 관계를 정립하면서 균형적이면서도 도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탄소중립 문제는 미·중 갈등 고조, 보호무역 체계, 에너지·자원 안보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주목해야 할 대외 환경

보호무역의 상징인 EU의 탄소국경세 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¹⁾에 대비하는 궁극적 방안은 제품 단위당 또는 교역 거래액당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기술 개발, 그리고 국내 탄소비용 부과 체계 정비 강화이다. 그러나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EU 기업들의 행정적 부담을 낮추고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포괄적 입법 개정안으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CBAM 규정도 상당히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보호무역 사례로 2022년 8월 16일 발효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²⁾도 미국의 중국 견제 상황과 연계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제 변수이다. 특히 기존 바이든 정부와 달리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에 따른 IRA 규정 변경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과 러·우 전쟁은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로 확산하는 현상을 보여줬다. 오늘날 세계 경제는 과거 석유과동 시기인 1970년대에 비해 훨씬 더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서 세계적 에너지 위기 확산에 대한 대비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에너지원(석탄, 석유, 가스)을 중단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에너지 안보 개념에서, 환경요인(자연재해, 지정학적 갈등, 글로벌 공급망 패러다임 변화, 에너지 시스템의 디지털화 등)에 대비하는 충격 회복력 관점으로 에너지·자원 안보의 대비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에 미국[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ineral Security Partnership: MSP)], EU[「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 Act: CRMA)」], 중국[희토류, 텅스텐 등 광물의 해외 유출 통제]은 우방국과 에너지 공급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통해 핵심 광물을 확보하고자 경주하고 있다.

한편, 민간과 산업계의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소비 운동인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³⁾ 대비

1) 탄소배출 비용의 내재화 및 탄소 누출 방지를 위해 도입한 제도. EU 배출권거래제 탄소가격과 연동해 인증서 가격을 설정하고 역외 기업에 비용을 부과하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배출량에 인증서 가격을 반영해 최종 비용을 산정함

2) 미국 산업부문의 제조업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중국 등 특정 국가의 자원의존도를 낮춰 미국의 친환경 산업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가 도입한 제도임. 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 보급, 취약계층 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 및 노동자 보호, 의료비 지원 등을 목표로 세법을 개정했음

3) 기업 소비 전력의 100%를 신재생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으로 조달하겠다는 캠페인성 자발적 목표로, 'The Climate Group' 주도로 2014년에 시작했으며 세계 굴지 기업 400개 이상(우리나라 기업 36개) 기업이 참여 중임(Climate Group, CDP, 2024 RE100: Annual Disclosure Report, 2025. 5.)

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RE100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 중이지만, RE100 이행 수단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계약 건수와 규모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⁴⁾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이번 정부에서는 특히 직접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제도⁵⁾의 적극적 운용을 계획 중이다. 직접 PPA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공급 물량 확보, 가격경쟁력 확보, 공정 제도(송배전 요금, 한전 전력판매 독점 시장) 등 국내 정책적 기반의 공고화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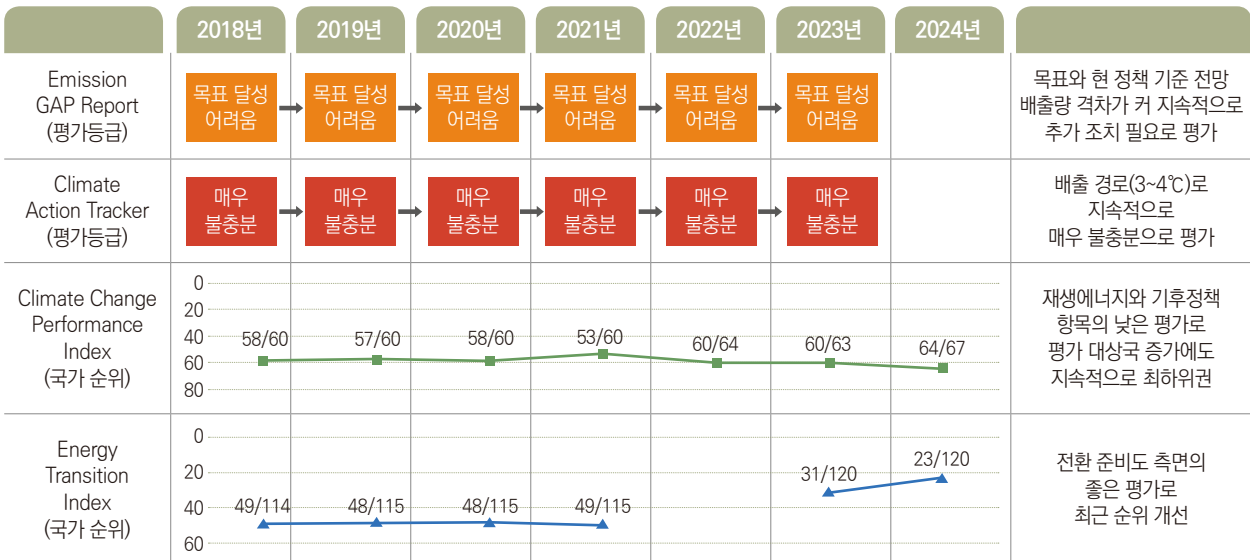
주목해야 할 국내 과제: 전력시장 구조와 배출권시장의 효율성

탄소중립은 이제 계획을 넘어 이행평가 단계로 접

어들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격년 투명성 보고서(Biennial Transparency Report: BTR)의 본격적인 작성 시기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탄소중립의 정책과 조치들이 진행·계획되고 있는바, 투명한 이행 점검은 정부의 향후 중요한 역할이다.

주요 국제기관들은 이행평가 보고서를 발간 중이다. EGR에서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매년 “목표 달성 어려움”으로 평가된다. 즉, NDC 목표와 현 정책 기준의 전망 배출량 격차가 10% 이상 이어서 추가 조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평가이다. CAT 또한 우리나라의 배출 경로가 3~4℃ 증가 경로에 있어, 글로벌 온도 상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됨을 지적한다. 반면, ETI에서는 최근 전환 준비도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국가 순위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인다.

그림 1 국제기관의 우리나라 이행평가 결과와 추세



주: 2022년 ETI 순위 정보를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통해 확인이 어려움에 따라 공란으로 둠
 자료: 한국환경연구원 이상엽 외, 『탄소중립정책연구Ⅲ: 탄소중립 정책수단 이행평가를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4, p. 112 [그림 3-8]

4) 2024년 7월 기준, 총 1,083MW 규모로 23건 계약 체결(RE100 협의체 자료)

5)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제도.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는 전기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남은 전력은 전력시장에 판매함. 한편, 부족한 전력은 전력시장 또는 판매사업자에게 구매할 수 있음

CCPI에서 우리나라의 평가 결과는 하위권에 속한다. 이는 재생에너지와 기후정책 항목의 낮은 평가에 기인한다. 대표적인 지적 사항으로는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비효율성, 전력시장 구조와 관련한 사항들이다. 전력시장 구조에 대해서는 화석연료 친화적인 전력시장 구조 및 보조금·공적자금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를 중심으로 탄소가격을 부과한다. 그러나 이외에도 연료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화석연료 보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과되고 있기도 하다. 배출권 가격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탄소가격 수준은 OECD가 제시한 2030년 최소 수준 60유로(약 8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생산자든 소비자든 우리가 지금까지 지불하지 않았던 비용이 추가로 요구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적정 탄소가격 부과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배출권 가격뿐만 아니라, 에너지세, 각종 보조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격 시그널하에서 비용 분담, 정부 수입 투자 환류 등이 가능하다.

2015년 도입한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현재 4기(2026~2030년)를 위해 배출허용총량, 유상할당 비중, 시장 활성화 등 관점에서 효과적인 운영 방안이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들과 병행해 탄소시장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령, 국내 배출량 비중과 배출권시장의 핵심 참여자인 전환부문의 경우, 강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나 신재생발전 의무가 부여되더라도 이에 필요한 비용은 생

산자인 발전사나 전력 소비자가 아닌, 정부가 지불하는 형태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지닌 전력 도소매의 독점적 시장 특성에 기인한다. 즉, 현재와 같은 왜곡된 전력시장의 전기요금 체제로는 신재생발전이나 온실가스 감축도 어렵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CCPI가 평가한 전력시장 구조와 배출권시장의 효율성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정부와 시장의 역할

위와 같은 전력시장 구조 개편과 배출권시장의 효율성 문제는 그동안 정부가 주요 정책 목표로 꾸준히 제시한 바 있으나, 아직도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다행히 이번 정부가 선결 과제 중 하나로 전기위원회의 독립 기구화와 전력감독원 신설을 공식 언급하고 있다. 전기위원회에 요금 인가권을 부여해 핵심 규제 기능과 독립성을 높이고,⁶⁾ 산하에 전력감독원을 신설해 전력시장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의무 강화와 비용 상승(전기요금 상승) 간 시장적 선순환 역할 배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같은 정책적 대안은 국내 에너지 전문가 대부분이 주장해 온 사항으로, 이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충 및 탄소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단, 이 과정에서 전기요금 등 탄소비용 부담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원칙으로, 전력·에너지시장의 가격 왜곡을 최소화하도록 매진해야 할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 고물가 관리, 정치적 상황 사이 얽힌 매듭은 이제 어떻게든 풀려야 한다.◎

6)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며, 지금까지 전기요금은 전력 당국(현 산업통상자원부)이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결정, 승인하는 체제임

글로벌 경제에서 주목받는 공기업: 주요국의 대표 공기업 현황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Fortune)은 매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계 최대 기업 500개를 선정한 '글로벌 500'을 발표한다. 한편, OECD는 약 60개국(OECD 회원국과 파트너 국가)의 국가별 공기업 제도를 비교·분석한 『Ownership and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A Compendium on National Practices』 시리즈를 2018년부터 3년 주기로 발간 중이다.²⁾

『공공기관 Brief』 20호에서는 지난 3년간(2023~2025년)의 포춘 글로벌 500과 『Ownership and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2024』의 제1장 내용을 토대로 현재 글로벌 경제에서 공기업이 갖는 위상과 주요국의 대표적인 공기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기업의 글로벌 경제 내 중요성 증대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기업 환경에서 공기업³⁾ 비중은 크게 확대됐다. 전 세계 매출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중 공기업의 수는 2000년 34개에서 2017년 102개, 2023년 126개⁴⁾로, 20년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3년 기준으로 이들 공기업은 2,100만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53조 5,000억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12조달러 이상의 매출과 7,300억달러의 이익을 창출했다. 또한 같은 해 기준, 126개 공기업 중 72%를 차지하는 91개가 비상장 기업에 해당한다.

강석훈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본 원고는 포춘(Fortune)이 선정하는 글로벌 500 (Fortune Global 500)¹⁾과 OECD가 발간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에서 번역한 『2024 주요국의 공기업 소유권 및 지배구조 제도 비교(Ownership and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2024)』의 '제1장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소유권 행사'를 토대로 저자가 작성한 것입니다.

1) Fortune, 2023 August/September Asia Pacific Edition 4호, 2024 August/September Asia Pacific Edition 4호, 2025 August/September Asia Pacific Edition Number 4호

2) 2025년 현재, 『Ownership and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A Compendium on National Practices』 시리즈는 2018년 판, 2021년 판, 2024년 판 등 총 3차례 발간됐음

3) 본고에서 사용하는 공기업의 정의는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가 법률상 사업체로 인정하는 모든 기업 가운데 국가가 소유권 또는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모두 공기업으로 간주한다. 여기에는 합자회사(joint stock company),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 주식합자회사(partnerships limited by shares)뿐만 아니라, 특정 법률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되고 경제적 성격으로 운영되는 특수목적기업(statutory corporations)도 포함됨

4) 포춘 글로벌 500 기업 중 공기업 수는 2023년 126개에서 2024년 123개, 2025년 113개로 소수 하락함

〈표 1〉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중 공기업의 비중(2023년 회계연도 기준)

	지표	포춘 500 전체 기업	포춘 500대 기업 중 공기업	전체 기업 대비 공기업 비율
	기업 수(개)	500	126	25%
	자산(USD bn ⁵⁾)	151,986	53,545	35%
	매출(USD bn)	40,957	12,303	30%
	이익(USD bn)	2,898	730	25%
	직원 수(명)	70,119,405	21,202,854	30%

자료: OECD, 『2024 주요국의 공기업 소유권 및 지배구조』; 포춘, 글로벌 500, 2023년 8/9월호, 2025년 1월 참조

글로벌 공기업 순위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은 매출, 수익, 자산, 직원 수 등 네 가지 지표로 구성된다. 포춘은 매년 3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종료되는 각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총매출을 집계해 500대 기업 순위를 산정하며, 수익·자산·직원 수에 대한 순위도 함께 제공한다. 이 글은 글로벌 500대 기업 중 공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비교·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표 2〉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출 기준 세계 10대 공기업을 보여준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가스 회사인 아람코(Saudi Aramco)와 2023년 독일의 유니퍼(Uniper)를 제외하면, 상위권 대부분은 중국 공기업이 차지한다. 특히 아람코, 중국국가전망공사(State Grid),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 중국석유화학집단공사(Sinopec Group) 등 상위 4대 공기업의 매출을 능가하는 민간기업은 미국의 월마트(Walmart)와 아마존(Amazon.com)에 불과하며, 이들 공기업은 애플(Appl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 전 세계 모든 기업의 매출을 넘어서고 있다.

〈표 3〉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수익 기준 세계 10대 공기업을 보여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애플(Apple), 알파벳(Alphabet),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 등 모든 민간기업을 제치고, 3년 연속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뒤를 이어 중국공상은행(Industrial & Commercial Bank of China: CBC), 중국건설은행(China Construction Bank: CCB), 중국농업은행(Agricultural Bank of China: ABC), 중국은행

5) 10억 미국 달러

<표 2> 2023~2025년 세계 10대 공기업(매출 기준)



순위	2023년	2024년	2025년
1	사우디아람코(Saudi Aramco) 6,030억 USD	중국국가전망공사(State Grid) 5,459억 USD	중국국가전망공사(State Grid) 5,484억 USD
2	중국국가전망공사(State Grid) 5,300억 USD	사우디아람코(Saudi Aramco) 4,949억 USD	사우디아람코(Saudi Aramco) 4,801억 USD
3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 4,830억 USD	중국석유화학집단공사 (Sinopec Group) 4,297억 USD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 4,126억 USD
4	중국석유화학집단공사 (Sinopec Group) 4,715억 USD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 (CNPC) 4,217억 USD	중국석유화학집단공사 (Sinopec Group) 4,075억 USD
5	중국건축공정총공사(CSCEC) 3,059억 USD	중국건축공정총공사(CSCEC) 3,204억 USD	중국건축공정총공사(CSCEC) 3,041억 USD
6	독일 유니퍼(Uniper) 2,883억 USD	중국공상은행(ICBC) 2,225억 USD	중국공상은행(ICBC) 2,215억 USD
7	중국공상은행(ICBC) 2,148억 USD	중국건설은행(CCB) 1,998억 USD	중국농업은행(ABC) 1,975억 USD
8	중국건설은행(CCB) 2,028억 USD	중국농업은행(ABC) 1,924억 USD	중국건설은행(CCB) 1,967억 USD
9	중국농업은행(ABC) 1,871억 USD	중국중철주식유한회사(CREC) 1,786억 USD	중국은행(Bank of China) 1,761억 USD
10	중국중화지주회사 (Sinochem Holdings) 1,738억 USD	중국은행(Bank of China) 1,723억 USD	중국중철주식유한회사(CREC) 1,613억 USD

주: 2023년은 회계연도 2023년 3월 이전에 종료되는 회계연도 기준을 의미하며, 2024년은 2024년 3월 이전, 2025년은 2025년 3월에 종료되는 회계연도 기준임

자료: 포춘, 2023년 8/9월호, 2024년 8/9월호, 2025년 8/9월호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Bank of China) 등 중국의 초대형 국영은행들과 러시아 국영은행 스베르뱅크(Sberbank)가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 또한 브라질의 페트로브라스(Petrobras),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Petronas), 노르웨이의 에퀴노르(Equinor), 러시아의 가즈프롬(Gazprom) 등 대형 에너지 공기업들이 뒤를 잇고 있다.

특히 미국우정공사(U.S. Postal Service: USPS)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개혁을 통해 2023년 공기업 중 수익 2위(전체 기업 10위)에 올랐으나, 2024년에는 65억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전체 순위가 497위까지 급락했다.

〈표 3〉 2023~2025년 세계 10대 공기업(수익 기준)



순위	2023년	2024년	2025년
1	사우디아람코(Saudi Aramco) 1,590억 USD	사우디아람코(Saudi Aramco) 1,207억 USD	사우디아람코(Saudi Aramco) 1,050억 USD
2	미국우정공사(USPS) 560억 USD	중국공상은행(ICBC) 514억 USD	중국공상은행(ICBC) 508억 USD
3	중국공상은행(ICBC) 536억 USD	중국건설은행(CCB) 470억 USD	중국건설은행(CCB) 466억 USD
4	중국건설은행(CCB) 481억 USD	중국농업은행(ABC) 380억 USD	중국농업은행(ABC) 392억 USD
5	중국농업은행(ABC) 385억 USD	중국은행(Bank of China) 328억 USD	중국은행(Bank of China) 330억 USD
6	브라질 페트로브라스(Petrobras) 366억 USD	브라질 페트로브라스(Petrobras) 249억 USD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 224억 USD
7	중국은행(Bank of China) 338억 USD	러시아 스베르뱅크 (Sberbank) 177억 USD	러시아 스베르뱅크 (Sberbank) 170억 USD
8	노르웨이 에퀴노르(Equinor) 287억 USD	미국 패니메이(Fannie Mae) 174억 USD	미국 패니메이(Fannie Mae) 170억 USD
9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 211억 USD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Petronas) 163억 USD	러시아 가즈프롬(Gazprom) 131억 USD
10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Petronas) 210억 USD	중국이동통신(China Mobile) 153억 USD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Petronas) 107억 USD

주: 2023년은 회계연도 2023년 3월 이전에 종료되는 회계연도 기준을 의미하며, 2024년은 2024년 3월 이전, 2025년은 2025년 3월에 종료되는 회계연도 기준임(국가별 기업 회계연도가 상이함)
 자료: 포춘, 글로벌 500, 2023년 8/9월호, 2024년 8/9월호, 2025년 8/9월호, 2025년 9월 참조

〈표 4〉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자산 기준 세계 10대 공기업을 보여준다. 2024~2025년 상위 4위권에 든 4대 중국 국영은행은 글로벌 500 전체 순위에서도 1위부터 4위를 기록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한 기업들이다. 이 외에도 국영 우편사인 중국우정집단공사(China Post Group), 중국 최대의 종합 금융 그룹인 중신그룹(Citic Group), 중국 최대 생명보험사인 중국생명보험(China Life Insurance) 등 또 다른 중국 공기업들이 10위권 안에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보증기관인 패니메이(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도 상위권에 올랐다. 그밖에 인도 최대 은행인 인도국영은행(State Bank of India)과 프랑스 우편사인 라 포스트(La Poste)가 10위권을 형성한다.

〈표 4〉 2023~2025년 세계 10대 공기업(자산 기준)



순위	2023년	2024년	2025년
1	중국공상은행(ICBC) 5조 7,429억 USD	중국공상은행(ICBC) 6조 2,973억 USD	중국공상은행(ICBC) 6조 6,886억 USD
2	중국건설은행(CCB) 5조 168억 USD	중국농업은행(ABC) 5조 6,177억 USD	중국농업은행(ABC) 5조 9,236억 USD
3	중국농업은행(ABC) 4조 9,190억 USD	중국건설은행(CCB) 5조 3,995억 USD	중국건설은행(CCB) 5조 5,558억 USD
4	미국 패니메이(Fannie Mae) 4조 3,053억 USD	중국은행(Bank of China) 4조 5,693억 USD	중국은행(Bank of China) 4조 8,034억 USD
5	중국은행(Bank of China) 4조 1,921억 USD	미국 패니메이(Fannie Mae) 4조 3,254억 USD	미국 패니메이(Fannie Mae) 4조 3,497억 USD
6	미국 프레디맥(Freddie Mac) 3조 2,083억	미국 프레디맥(Freddie Mac) 3조 2,810억 USD	미국 프레디맥(Freddie Mac) 3조 3,867억 USD
7	중국우정집단공사 (China Post Group) 2조 1,320억 USD	중국우정집단공사 (China Post Group) 2조 3,106억 USD	중국우정집단공사 (China Post Group) 2조 4,598억 USD
8	중신그룹(Citic Group) 1조 5,365억 USD	중신그룹(Citic Group) 1조 6,177억 USD	중신그룹(Citic Group) 1조 6,905억 USD
9	중국생명보험 (China Life Insurance) 8,883억 USD	중국생명보험 (China Life Insurance) 9,540억 USD	중국생명보험 (China Life Insurance) 1조 246억 USD
10	인도 SBI (State Bank of India) 7,253억 USD	프랑스 라 포스트(La Poste) 8,455억 USD	인도 SBI (State Bank of India) 8,561억 USD

주: 2023년은 회계연도 2023년 3월 이전에 종료되는 회계연도 기준을 의미하며, 2024년은 2024년 3월 이전, 2025년은 2025년 3월에 종료되는 회계연도 기준임(국가별 기업 회계연도가 상이함)

자료: 포춘, 2023년 8/9월호, 2024년 8/9월호, 2025년 8/9월호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5〉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가장 많은 직원을 고용한 세계 10대 공기업을 보여준다. 중국국가전망공사(State Grid)는 약 135만명,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는 약 98만명을 고용하며 공기업 고용 순위 1·2위뿐 아니라 글로벌 500 전체 고용 순위에서도 미국의 월마트(약 210만명)와 아마존(약 150만명)에 이어 각각 3위, 4위에 올랐다. 뒤를 이어 미국과 중국의 국영 우편사인 중국우정집단공사(약 75만명)와 미국우정공사(USPS)가 각각 3위, 4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중국석유화학공집단공사(Sinopec Group)와 중국 진닝홀딩그룹(Jinneng Holding Group), 중국농업은행(ABC)과 중국공상은행(ICBC), 중국이동통신(China Mobile) 등도 각각 40만명 이상을 고용하며, 중국 공기업들은 매출, 수익, 자산에 이어 고용 순위에도

〈표 5〉 2023~2025년 세계 10대 공기업(고용 기준)



순위	2023년	2024년	2025년
1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 108만 7,049명	중국국가전망공사(State Grid) 136만 1,423명	중국국가전망공사(State Grid) 135만 4,310명
2	중국국가전망공사(State Grid) 87만 287명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 102만 6,301명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 98만 5,155명
3	중국우정집단공사 (China Post Group) 75만 2,547명	중국우정집단공사 (China Post Group) 72만 8,776명	중국우정집단공사 (China Post Group) 72만 3,227명
4	미국우정공사(USPS) 57만 6,065명	미국우정공사(USPS) 58만 2,781명	미국우정공사(USPS) 58만 6,700명
5	중국석유화학집단공사 (Sinopec Group) 52만 7,487명	중국석유화학집단공사 (Sinopec Group) 51만 3,434명	러시아 가스프롬(Gazprom) 50만 1,000명
6	중국 진닝홀딩그룹 (Jinneng Holding Group) 47만 839명	러시아 가스프롬(Gazprom) 49만 2,200명	중국석유화학집단공사 (Sinopec Group) 49만 5,096명
7	러시아 가스프롬(Gazprom) 46만 8,000명	중국이동통신(China Mobile) 45만 3,394명	중국이동통신(China Mobile) 45만 6,965명
8	중국농업은행(ABC) 45만 2,258명	중국농업은행(ABC) 45만 1,003명	중국농업은행(ABC) 45만 4,716명
9	중국이동통신(China Mobile) 45만 2,202명	중국 진닝홀딩그룹 (Jinneng Holding Group) 43만 9,051명	중국 진닝홀딩그룹 (Jinneng Holding Group) 42만 3,143명
10	중국공상은행(ICBC) 42만 7,587명	중국공상은행(ICBC) 41만 9,252명	중국공상은행(ICBC) 41만 9,252명

주: 2023년은 회계연도 2023년 3월 이전에 종료되는 회계연도 기준을 의미하며, 2024년은 2024년 3월 이전, 2025년은 2025년 3월에 종료되는 회계연도 기준임(국가별 기업 회계연도가 상이함)
 자료: 포춘, 2023년 8/9월호, 2024년 8/9월호, 2025년 8/9월호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서도 상위권을 차지한다. 또한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인 가스프롬(Gazprom)은 약 50만명을 고용해 공기업 고용 순위 5위권에 포함돼 있다.

글로벌 공기업의 산업별 분포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된 공기업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에너지 분야, 특히 석유·천연가스 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러시아의 가스프롬, 중국의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와 중국석유화학집단공사(Sinopec Group), 인도

〈표 6〉 산업별로 분류한 국가별 대표 공기업

산업	공기업명	국가
 에너지 (석유·천연가스)	사우디 아람코(Saudi Aramco)	사우디아라비아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hina National Petroleum: CNPC)	중국
	중국석유화학집단공사(Sinopec Group)	
	중국해양석유총공사(China National Offshore Oil: CNOOC)	
	중국중화집단공사(Sinochem Holdings)	
	인도석유공사(Indian Oil: IOCL)	
	인도석유천연가스공사(Oil & Natural Gas: ONGC)	인도
	에퀴노르(Equinor)	노르웨이
	가즈프롬(Gazprom)	러시아
	페트로브라스(Petrobras)	브라질
	페멕스(PEMEX)	멕시코
	에코페트롤(Ecopetrol)	콜롬비아
	페트로나스(Pertronas)	말레이시아
	PTT 그룹(Public Company Limited: PTT)	태국
	페르타미나(Pertamina)	인도네시아
	타이완중유공사(CPC)	대만
한국가스공사(KOGAS)	한국	
 에너지 (전력)	중국국가전망공사(State Grid)	중국
	국가전력투자공사(State Power Investment: SPIC)	
	유니퍼(Uniper)	독일
	프랑스전력공사(Electricité de France: EDF)	프랑스
	한국전력공사(KEPCO)	한국
	도쿄전력(Tokyo Electric Power)	일본
 금융 (국영은행)	중국공상은행(Industrial & Commercial Bank of China: ICBC)	중국
	중국건설은행(China Construction Bank: CCB)	
	중국농업은행(Agricultural Bank of China)	
	중국은행(Bank of China)	
	교통은행(Bank of Communication)	
	인도국영은행(State Bank of India: SBI)	인도
	스베르뱅크(Sberbank)	러시아
	브라질은행(Banco de Brasil)	브라질
CEF(Caixa Econômica Federal)		
 국영 우편사	중국우정집단공사(China Post Group)	중국
	미국우정공사(United States Post Service)	미국
	라 포스트(La Poste)	프랑스
	포스테 이탈리아네(Poste Italiane)	이탈리아

자료: 포춘, 글로벌 500, 2023년 8/9월호, 2024년 8/9월호, 2025년 8/9월호를 바탕으로 저자가 산출 및 작성

의 인도석유공사(IOCL)와 인도석유천연가스공사(ONGC), 노르웨이의 에퀴노르, 브라질의 페트로브라스(Petrobras), 멕시코의 페멕스(PEMEX), 콜롬비아의 에코페트롤(Ecopetrol),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Petronas), 태국의 PTT, 인도네시아의 페르타미나(Pertamina) 등은 각국을 대표하는 대형 에너지 공기업이자 자국 내 최대 기업들이다. 다음으로 많은 공기업이 속한 분야는 금융·은행 부문이며, 중국의 4대 국영은행(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을 비롯해 인도국영은행(SBI), 러시아 스베르뱅크(Sberbank), 브라질의 브라질은행(Banco Do Brasil)과 CEF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중국우정집단공사(China Post Group), 미국우정공사(USPS), 프랑스 라 포스트(La Poste), 이탈리아 포스테 이탈리아네(Poste Italiane)와 같은 국영 우편사, 그리고 중국국가전망공사, 독일 유니퍼, 프랑스전력공사(EDF), 한국전력공사(KEPCO), 도쿄전력 등 대형 전력 공기업들도 글로벌 500에 다수 포함되어 있다.

국가별 공기업 비중

2023년 기준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된 공기업 126개 중 86개 기업이 중국 소유 기업이다.⁶⁾ 이들 기업은 총 1,656만 4,5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매출은 약 8조 3,000억달러, 수익은 3,550억달러, 자산은 35조 6,000억달러에 이른다. 이 가운데 79개 기업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사이다. 중국 공기업들은 금속, 엔지니어링, 건설, 광업, 원유 생산을 비롯해 자동차, 부동산, 해운, 운송·물류 등 거의 모든 유형의 산업에서 활발히 사업을 영위한다.

글로벌 500대 기업 내 공기업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의 경제 시스템이 지닌 구조적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림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은 글로벌 500에 포함된 전체 135개 기업 중 86개(64%)가 공기업이다. 반면 미국은 전체 136개 중 133개가 민간기업(98%)이며, 공기업은 단 3개(2%)에 불과하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 공기업(패니메이, 프레디맥, 미국우정공사)의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다⁷⁾고 밝힌 바 있어, 향후 미국의 공기업 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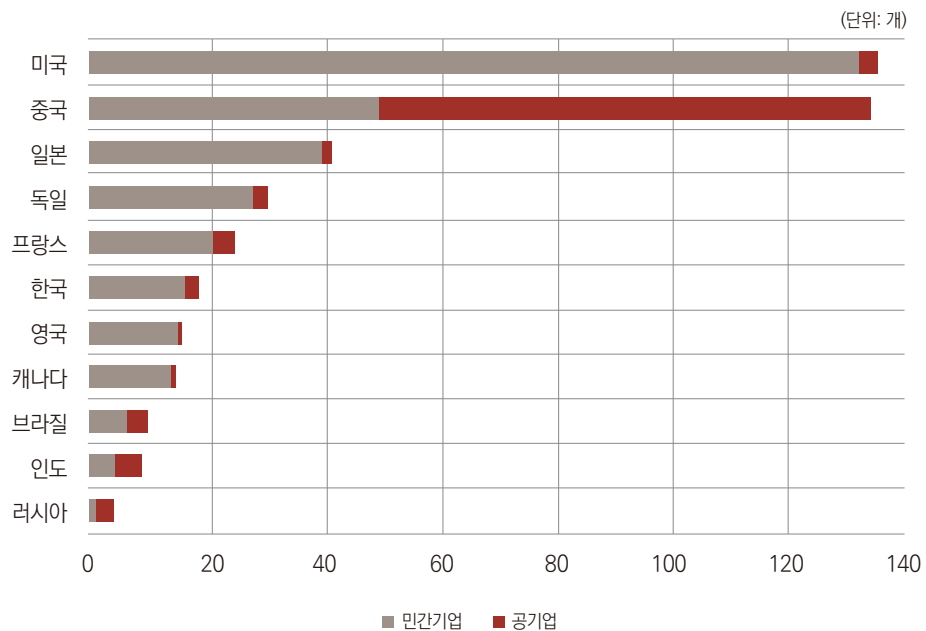
기타 주요 국가들의 공기업 비중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된 41개 기업 중 공기업은 도쿄전력 1개에 불과하며, 독일은 30개 기업 중 유니퍼(에너지)와 도이체반(철도) 등 2개만이 공기업이다. 프랑스는 24개 기업 가운데 EDF(전력공사), La Poste(우편), SNCF(철도) 등 3개 공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18개 기업 중 한국전력공사와 한

6) 글로벌 500에 포함된 중국 공기업은 2024년 기준 82개, 2025년 기준 71개임

7) CBS NEWS, <https://www.cbsnews.com/news/trump-fannie-mae-freddie-mac-what-to-know/>, AP, <https://apnews.com/article/us-postal-service-privatization-trump-musk-dejoy-692d56e701f3853af4ce914832a33124>,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0798401>, 2025년 9월 참조

국가공사 등 2개가 공기업이다. 반면 영국(18개)과 캐나다(14개)는 글로벌 500에 포함된 기업이 모두 민간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브라질은 9개 기업 중 페트로브라스(에너지), 브라질은행(은행), CEF(은행) 등 3개가 공기업이며, 인도는 8개 기업 중 인도석유공사(IOCL), 인도석유천연가스공사(ONGC), 인도생명보험공사(LIC), 인도국영은행(SBI) 등 4개가 공기업이다. 러시아의 경우, 글로벌 500에 포함된 3개 기업 가운데 가스프롬(에너지)과 스베르방크(은행) 등 2개가 공기업으로 나타난다([그림 1] 참조).

[그림 1] 주요국 글로벌 500 기업 구성 비교: 민간기업 vs 공기업 비율(2023년 회계연도 기준)



자료: 포춘, 글로벌 500, 2023년 8/9월호를 바탕으로 저자가 산출 및 작성

결론: 공기업의 글로벌 경제 내 위상 강화 요인

지난 20년간 국제적으로 공기업의 위상이 높아진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원인은 세계 각국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인수합병(M&A) 또는 구조조정을 통해 공기업 대형화를 추진해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시장 경쟁 심화 대응, 에너지·금융 안정성 확보, 내부 비효율 해소라는 공통된 정책 목표 아래 이루어졌다. 특히 중국, 인도 및 동남아 국가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공기업 개혁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대형 민간기업과 맞설 수 있는 산업별 ‘국가 챔피언 기업’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했으며, 유럽, 중동 같은 기타 국가들도 전략적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추구했다. 중국은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가 주도해 경쟁이 중복되

는 기업들을 합병하고 전략적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챔피언’을 육성하는 공기업 대형화를 핵심 개혁 과제로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2015년 중국의 양대 철도차량 제조사 CNR과 CSR이 합병하여 세계 최대 철도차량 제조사인 중국중차(CRRC)가 출범했으며, 중국원양해운(COSCO)과 중국해운(China Shipping)이 합병하여 글로벌 조선 해운 시장을 주도하는 대형 그룹인 중국코스코그룹(China COSCO Shipping)이 설립됐다.⁸⁾



인도의 경우, 2017년 인도국영은행(SBI)이 계열 은행 5곳을 흡수해 초대형 국영은행으로 재탄생했으며, 2020년에는 인도석유천연가스공사(Oil and Natural Gas Corporation: ONGC)가 정유사 HPCL(Hindustan Petroleum Corporation Limited)을 인수했다. 노르웨이는 2007년 스타토일(Statoil)이 노르스크하이드로(Norsk Hydro)의 석유·가스 부문을 흡수해 이후 에퀴노르(Equinor)로 재편됐고, 프랑스는 2016~2018년 원전기업 아레바(Areva)를 분할·재편하며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프라마툼(Framatome)을 인수해 원전산업 재편을 주도했다. 독일 국영 철도사인 도이체반(Deutsche Bahn)은 2010년 영국 아리바(Arriva)를 인수해 유럽 교통망을 확장했고, 멕시코의 페멕스(PEMEX)는 2022년 미국 텍사스의 디어파크(Deer Park) 정유소를 100% 인수하여 해외 다운스트림 역량을 강화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2020년 사우디아람코(Saudi Aramco)가 사빅(SABIC) 지분 70%를 인수해 정유-석유화학 가치사슬(밸류체인)을 통합했다.

두 번째 원인은 지난 20년간 경제·사회적 요인과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민간기업이 국유화되는 사례가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다. 예컨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부실 모기지저당증권(MBS)을 떠안은 패니메이(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이 파산 위기에 몰리자, 미국 정부는 약 2,000억달러를 투입해 두 기업을 사실상 국유화했다. 현재 두 기관은 미 재무부가 7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파산 위기에 몰린 도쿄전력(TEPCO)에 1조엔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사실상 국유화했다. 독일 연방정부도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스 공급 급감으로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자 유니퍼(Uniper)의 지분 99%를 인수해 국유화하고, 에너지 기업 세페(Securing Energy for Europe: SEFE) 역시 국유화했다.○

8) 그 밖에도, 2015년에는 중국전력투자공사(China Power Investment)와 국가원자력기술공사(State Nuclear Power Technology Corporation)가 통합해 국가전력투자공사(SPIC)가 출범했으며, 2017년에는 중국 최대 석탄기업 선화(Shenhua)와 발전사 귀덴(Guodian)이 합병하여 세계 최대 석탄·발전 복합기업인 중국에너지투자공사(China Energy Investment Corporation)가 설립되었다. 2020년에는 산시성 내 다수의 석탄·전력 기업을 통합한 진닝홀딩그룹(Jinneng Holding Group)이 출범했고, 희토류산업에서도 2022년 국영 기업들을 통합한 중국희토그룹(China Rare Earth Group)이 설립됐으며 2019년에는 중국석유화학집단(Sinopec)과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PetroChina)의 파이프라인 및 저장 자산을 통합해 파이프차이나(PipeChina)가 설립되었다.

인공지능(AI) 산업의 글로벌 동향과 전망

인공지능(AI) 개요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조사부
산업정책조사팀

OECD AI Principles와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은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입력값을 받아 추론을 통해 환경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산출물을 만드는 기계 기반 시스템으로 정의한다. AI의 핵심은 추론 능력으로, 이는 입력값과 출력값의 단순 매칭이 아니라 주어진 정보에서 새로운 정보·모델·알고리즘을 도출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AI를 추론 능력 구현 방식에 따라 구분하면 논리·지식 기반 AI와 학습 기반 AI로 나눌 수 있다.

논리·지식 기반 AI는 입력값 분석 후 미리 정의된 규칙·논리를 적용해 산출물을 만드는 방식[입력 → IF(입력값 분석) → THEN(규칙 선택·적용) → 결과]으로, 투명한 작동 원리와 높은 신뢰성이 장점이다. 그러나 복잡하고 새로운 문제 대응에 한계가 있고, 규칙이 많을수록 충돌이 발생하는 등 제한된 확장성과 적응성이 단점이다.

학습 기반 AI는 기계학습으로 데이터에서 스스로 패턴·규칙을 찾아 예측·결정을 내리는 방식인데, 복잡한 문제해결이 가능하고 자율학습을 통한 높은 유연성·적응력·확장성을 지닌다. 하지만 추론 과정과 작동 원리가 불투명한 ‘블랙박스’ 문제로 산출물에 대한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학습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과거에는 전문가 시스템[마이신(MYCIN/의료), 덴드랄(DENDRAL/화학) 등]과 같은 논리·지식 기반이 기술 발전을 주도했다면, 현재는 학습 기반, 특히 파운데이션 모델과 생성형 AI가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GPT, 제미니(Gemini), 그록(Grok) 등으로 대표되는 파운데이션 모델은 대규모 데이터를 인공지능망¹⁾(2024년 노벨물리학상 수상)과 자기지도학습²⁾으로 훈련한 AI로, 범용성이 높아 여러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생성형 AI는 입력값의 구조·특성을 모방하여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시스템으로,

1) 데이터를 여러 단계(노드)로 나누어 분석하며 단계별로 중요 특징을 파악해 결과를 도출(순방향)한 후 결과물 점검과 피드백을 통한 단계별 가중치 조정(역방향)으로 보다 정확한 결과를 생산하는 방식

2) 사람이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 대신 AI가 데이터 내에서 반복되는 구조·특성을 파악해 스스로 규칙·관계를 찾는 학습법

파운데이션 모델이 주류이나 알파폴드(AlphaFold/의약, 2024년 노벨화학상 수상), VLA(로봇) 등 전문 분야 특화 시스템의 개발·활용도 활발하다. 하지만 논리·지식 기반이 도태된 방식은 아니며 오히려 AI 경량화를 위한 논리·지식 기반의 역할과 장점이 재조명되며 두 방식을 결합하는 연구가 활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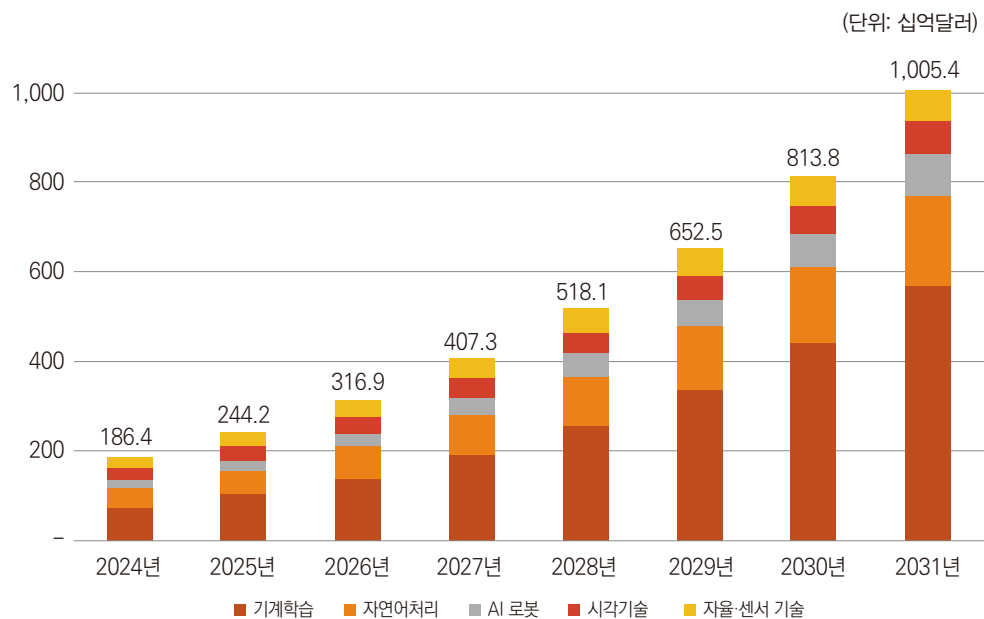
인공지능(AI) 시장 전망

글로벌 AI 시장은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먼저 AI 기업들의 투자유치액은 2024년 1,864억달러에서 2031년 1조달러로, 연평균 27.2%, 매출은 2024년 6,382억달러에서 2031년 2조 1,568억달러로 연평균 19.0%의 성장이 예상된다(Statista, Precedence Research). 심지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AI 기업들의 매출이 2033년 4조 7,72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AI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큰 데, 국제통화기금(IMF)은 AI가 세계 GDP를 향후 5년간 최대 2.4%, 향후 10년간 최대 4%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기관은 더욱 긍정적으로 보는데 골드만삭스는 2033년까지 7%, PWC는 2035년까지 최대 15%의 세계 GDP 증가를 전망했다. 이는 AI가 생산성 향상, 자본 효율성 개선과 새로운

[그림 1] AI 시장 전망



주: AI 기업들의 투자유치 규모(funding amounts)
 자료: Statista, Market Insights

제품·서비스 창출로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끌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각국은 이러한 관점에서 AI를 국가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분야별로 기계학습 투자유치액은 2024년 771억달러에서 2031년 5,683억달러, 비중은 2024년 41.4%에서 2031년 56.5%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당분간 AI 개발·구축·고도화 중심의 성장을 예상할 수 있다. AI 응용·활용에서는 자연어처리가 2024년 398억달러에서 2031년 2,015억달러로 성장해 타 분야(자율·센서, 시각처리, 로봇)보다 큰 시장을 형성할 전망이다.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

글로벌 AI 경쟁 구도는 미·중 양강 체제로 고착화 중이며 특히 미국은 시장을 주도하며 중국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일례로 2024년 미국이 보유한 주요 AI 모델[주목할 만한 AI 모델(Notable AI models)]³⁾은 40개로, 중국(15개)과 프랑스(3개)를 크게 앞서는데, 상위 15개 보유기관 중 미국은 9개 기관이 35개(구글, OpenAI 각 7개 등), 중국은 5개 기관이 14개(알리바바 6개 등)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AI 민간투자 역시 2024년 미국은 투자액 1,091억달러, 신규 피투자 기업 1,073개로, 중국(93억달러, 98개), 영국(45억달러, 116개)을 압도한다.

한편, AI가 디지털 주권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미·중 외에도 세계 각국은 AI 모델·데이터·인프라·인재를 자국이 직접 개발·운영·통제하는 AI 생태계, 즉 소버린 AI(Sovereign AI)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각

〈표 1〉 주요국 AI 보유 및 민간투자 현황(2024년)

구분	 미국	 중국	 EU	 한국
주요 AI 모델(개)	40	15	3(프랑스)	1
민간투자액(억달러)	1,091	93	45(영국)	13
신규 피투자 기업(개)	1,073	98	116(영국)	52

자료: 스탠퍼드대학교 HAI(Stanford University 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dex Report 2025, 2025. 4.

3) 주목할 만한 AI 모델(Notable AI models): AI 연구자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 에포크 AI(Epoch AI)가 기술성, 역사성, 영향력 등을 반영해 선정한 중요 AI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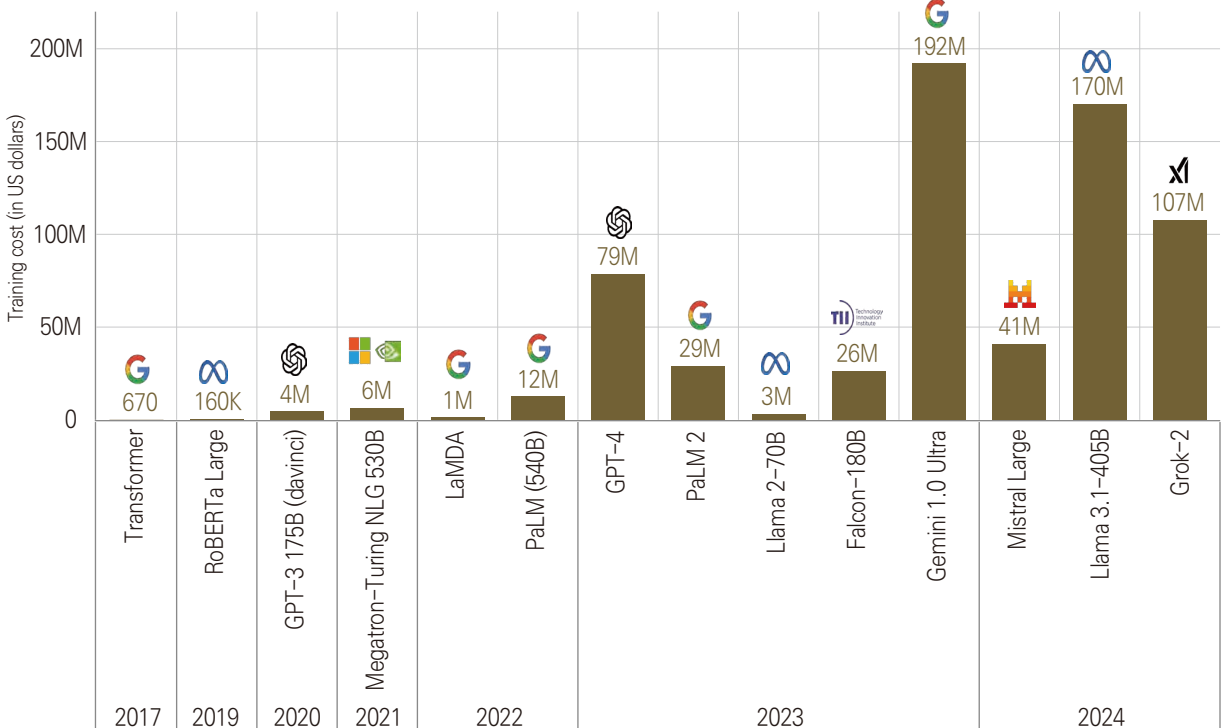
각 목표액 1천억달러의 투자 및 국부펀드 조성 계획을 공개했다(사우디아라비아 Project Transcendence, UAE MGX Fund). 또한 프랑스(1,090억유로), 캐나다(24억캐나다달러), 인도(12.5억달러), 싱가포르(10억달러)도 AI 생태계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급증하는 인공지능(AI) 학습비용

AI 개발의 핵심 요소인 학습량과 학습비용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AI Index Report 2025’에 따르면 주요 AI 모델 학습량은 5개월, 대규모 언어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규모는 8개월, 전력 사용량은 매년 두 배씩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학습을 위한 데이터 규모는 2017년 트랜스포머 20억 토큰⁴⁾에서 2024년 Llama 3.3 15조 토큰으로, 학습량은 2017년 트랜스포머 7,400페타플롭(petaFLOP)⁵⁾에서 2024년

[그림 2] 주요 AI 모델별 추정 학습비용



자료: 스탠퍼드대학교 HAI, AI Index Report 2025, 2025. 4.

4) 토큰(Token): 텍스트를 처리하는 최소 단위로 단어, 구절, 문장부호 등이 있음
 5) petaFLOP: 1petaFLOP은 초당 10¹⁵(1천조)번의 연산을 의미

GPT4o 380억petaFLOP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에 따라 AI 학습비용(추정치)은 2017년 트랜스포머가 670달러에 불과했으나 2024년 Llama 3.1은 무려 1.7억달러로 급증했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비용 증가로 구글, MS 같은 소수 거대 기술 기업들이 AI 개발 경쟁을 주도하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주요 AI 모델 보유 상위 15개 기관(52개 모델) 중 13개 기관이 거대 기술 기업(구글, OpenAI, 메타 등)이고, 이들이 보유한 AI 모델은 48개에 달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AI 기술의 진입장벽을 높여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고 특정 기업의 이익과 편향에 휘둘릴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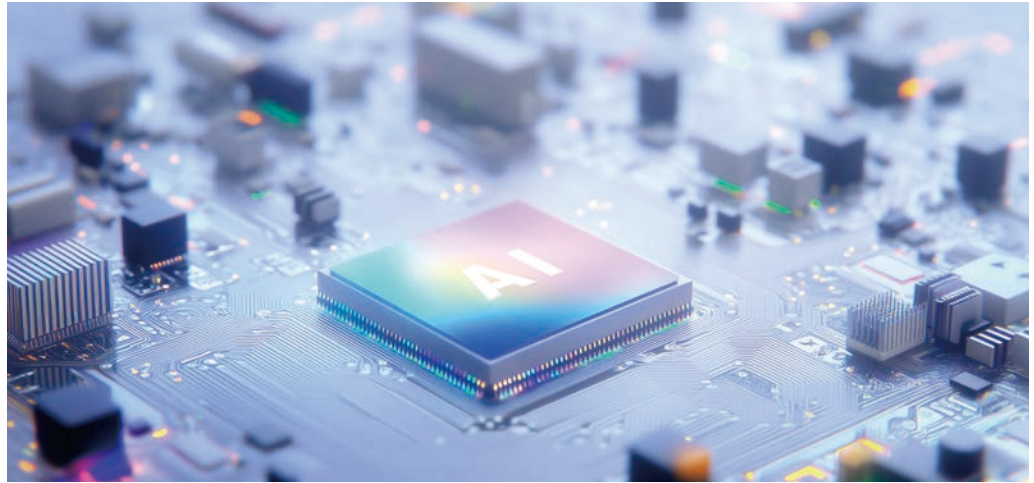
산업계의 인공지능(AI) 도입 및 성과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AI 도입은 노동생산성을 높인다고 나타났다. 특히 저숙련 근로자의 향상 폭이 큰데, 일례로 2023년 컨설팅 분야 대상 연구에서 AI 도입은 저숙련 근로자의 생산성을 43%까지 개선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산업현장의 AI 도입도 활발한데 실제로 2024년 맥킨지(McKinsey)가 2차례에 걸쳐 진행한 기업 설문조사(응답자 2,854명)에서 AI를 1개 이상의 사업 영역에 도입했다는 응답자는 2023년 55%에서 2024년 78%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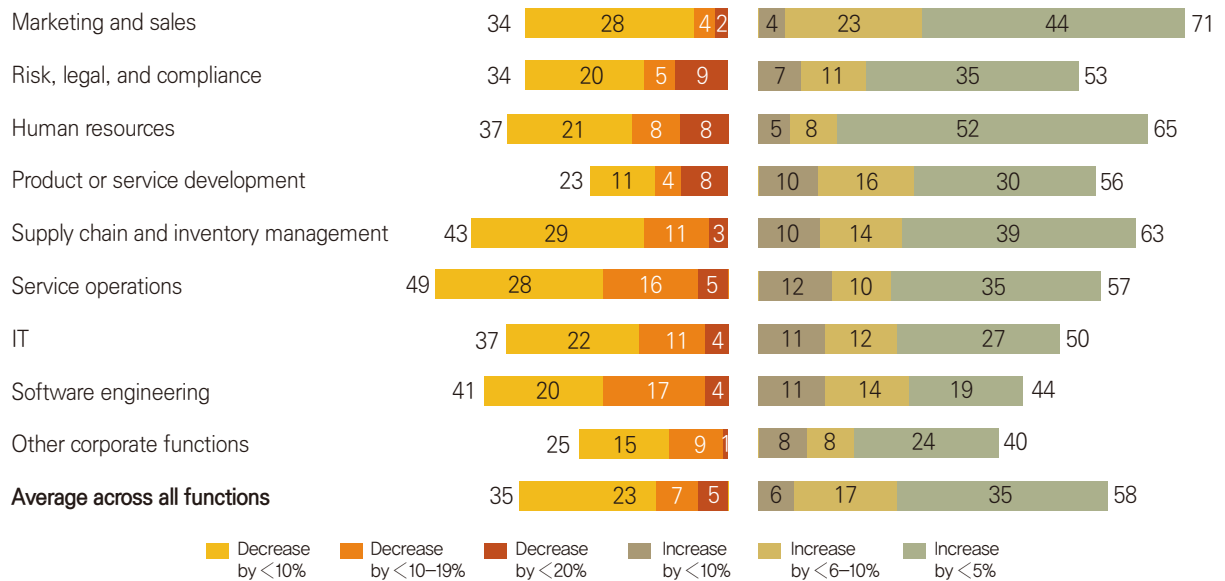
〈표 2〉 AI의 노동생산성 향상 효과

연구자	조사 분야	노동생산성 향상	
		저숙련 근로자	고숙련 근로자
Brynjolfsson 외(2023년)	고객 지원	34%	-
Dell'Acqua 외(2023년)	컨설팅	43%	17%
Cui 외(2024년)	소프트웨어 개발	21~40%	7~16%
Hoffman 외(2024년)	소프트웨어 개발	12~27%	5~10%



다만 AI 도입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나타났다. 예를 들어 비용 절감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로 낮았고, 비용 절감 수준도 10% 미만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매출 증가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58%였으나 매출 증가 수준은 5% 이하라는 답변이 많았다. 이를 통해 AI에 대한 활발한 투자와 도입에도 불구하고 산업계 전반의 성과 창출은 아직 초기 단계임을 엿볼 수 있다.○

[그림 3] AI 도입 효과 설문조사 결과



자료: McKinsey & Company, The state of AI in early 2024, 2024. 5.

“국민에게 가스안전을 배송합니다”

가스안전 복지등기 사업

추진 배경

» 사고우려 시설 선제적 발굴·개선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필요

- 도서·산간 지역은 가구 대다수가 고령층이고 도시가스 보급이 되지 않아 소규모 LPG 사용 주택이 많지만, 접근성 같은 문제로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 의무가 미흡
- 또한 저장량이 적은(250kg 미만) 소규모 LPG 사용 주택은 법정검사 대상이 아니어서 제도권 내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음

» 가스안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고위험 사고 사전예방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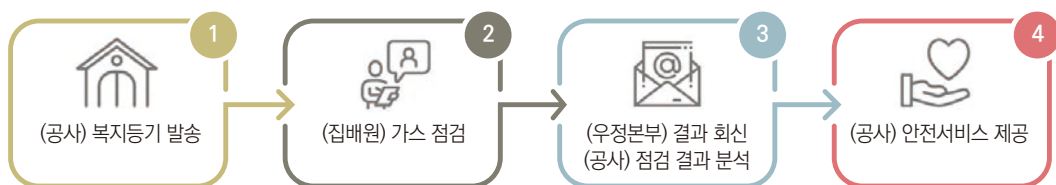
- LPG의 경우 매년 가스사고 1위(1978년 이후)를 차지하며, 그 중 주택 가스사고는 최근 5년간 85건(42.9%)으로 가장 비중이 높음
- 특히 최근 경북·경남 지역 대형 산불과 같이 재난 발생 시, LPG 폭발 등 2차 피해 확산, 대형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전예방 필요



추진 내용

» 도심과 떨어져 가스안전 점검이 미흡한 도서·산간 지역 내 가스사고 위험시설을 발굴하고 종합적 가스안전 서비스 제공

- (공사) 안전 관리에 취약한 도서·산간지역 가구 발굴, 우정사업본부로 복지등기 발송
- (우정사업본부) 공사의 안전교육을 받은 집배원이 우편물과 함께 복지등기 배송, 가스안전 체크리스트* 작성·회신
- * ① 가스 사용, ② 가스 누출, ③ 용기 실내 보관, ④ 막음 조치 미비, ⑤ 급속배관 사용 여부
- (공사)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 사고우려 시설 신속 점검과 개선 조치 수행



민간의 '초(超)격차' 기술 혁신을 위한 첨단 인재 양성·사업화 지원

추진 배경

- » 디지털·그린·첨단 산업까지 산업구조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기술 초격차 확보가 국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양상
 - 특히 ① 인재 확보, ② 인프라 지원, ③ 사업화 지원 등 세 축의 동시 강화가 관건
- » 또한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정책 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정책적 적합성을 높여 시너지 창출이 필요한 시점



추진 내용

- » 인재양성 컨트롤타워 확보와 기업수요 기반 첨단·주력 산업 인재 공급 확대
 - (인재 컨트롤타워)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 지정으로 인재 양성 계획 수립-수요 연계-성과관리 기능을 통합(첨단인재 DB·디지털배지 플랫폼 운영)
 - (수요맞춤형 교육) 첨단산업 아카데미·조기취업형 계약학과·특성화대학(원) 확대로 기업 수요에 적시 대응
 - (글로벌 역량 강화) 한·미/한·네 등 해외 교류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 구축(장학생 제도·현지 아카데미 운영)



» 민간기업의 혁신 창출을 위한 산업기술 혁신 인프라 구축

- (연구장비 도입 기간 단축) 과제 평가, 장비심의 병행으로 평가 절차 간소화
- (연구장비 활용도 제고) 연구장비 공동활용 체계 강화와 i-Tube* 대외 인지도 제고를 통해 연구장비 가동률 및 공동활용도 제고

* i-Tube: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Equipment Shared-use System)



» 기술이전 활성화, 자금지원 정책을 통한 기술사업화 활성화

- (기술이전 촉진) 온오프라인 기술거래 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기술이전 활성화
- (기술나눔) 대기업·공공기관 우수 기술을 중소기업으로 나눔
- (민관 공동 펀드 조성) 산업은행, R&D 전담 은행 연계로 대규모 펀드 조성



추진 성과

» 산업 수요에 맞춘 첨단·주력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민간 기술혁신 역량 기반 마련

- 첨단산업 아카데미 인력 양성: 2023년 738명 → 2024년 1,817명(약 146% 증가)
- 특성화대학(원) 확대: 대학 8 → 21개, 대학원 3 → 11개로 확장
- 글로벌 프로그램(2024년): 한·미 장학생(340명), 한·네 반도체 아카데미 등 현지 교육



» 중소·중견기업의 R&D 접근성 개선을 위한 혁신 인프라 활용성 제고

- 연구장비 활용성: 2023년 장비가동률 66.31% → 2024년 75.76%(전년 대비 성과 개선)
- 장비 공동활용도: 2023년 9,474건 → 2024년 1만 843건(약 14.5% 증가)



» 기술이전 확대와 민간투자 연계를 통해 '기술 → 시장' 전환 성과 가시화

- 기술이전 건수: 2023년 1,692건 → 2024년 2,089건(약 23.5% 확대)
- 기술니움 성과(2024년): 평균 2.2억원 매출액 증가, 평균 1.8개월 개발기간 단축
- 민간투자 유치(2024년): 민관 금융기관 대규모 펀드 결성 2,465억원(진흥원 출자 600억원)



향후 계획

» (인재 양성 강화) 첨단·주력 산업 분야 인재 양성 확대를 위한 정책플랫폼 고도화로 민간 수요 산업기술 인재의 적시 지원

» (인프라 확장 / AI·디지털화) 장비 공동활용 플랫폼의 데이터 활용과 연동 고도화로 장비가동률, 공동활용도를 지속 제고

» (사업화 연계 심화) 기술이전 이후 '투자 - 인증 지원 - 규제 해소' 패키지형 지원을 통해 기술 상용화 기간 단축, 매출 전환률 제고



공공기관 TALK

〈공공기관 TALK〉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전하는 생생한 이야기와 경험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공공기관 박람회’에서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주요 사업과 정책적 역할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관의 다양한 노력을 살펴본다. 이어 ‘잡(JOB)담’에는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소개하고,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구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았다. 이번 호에서는 한국철도공사와 새만금개발공사 담당자를 만나본다. 마지막으로 ‘나의 취업성공기’에서는 ‘2024년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 장애인 채용 부문’ 당선작 중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마사회 직원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공공기관의 다양한 이야기가 독자분들께 흥미롭게 전달되기를 희망한다.

공공기관 박람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잡(JOB)담

한국철도공사 / 새만금개발공사

나의 취업성공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한국마사회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도약을 선도하는 든든한 평생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편 —



김주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홍보실 과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한민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상점가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2014년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이 통합하여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소상공인, 전통시장·상점가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목표로 설립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소진공은 소상공인의 창업·성장·재기 전 과정을 지원하고, 전통시장과 상권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국가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의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99년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소상공인 지원이 이뤄졌고, 2005년 시장경영지원센터 설립(2010년 시장경영진흥원으로 기관명 변경), 2006년 소상공인진흥원 창립을 거쳐 2014년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이 통합되면서 지금의 소진공이 출범했다. 현재 본사는 대전광역시에 자리 잡고 있고, 전국 12개 지역본부와 78개 지역센터를 운영하면서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과 밀착 지원을 펼치고 있다.

그림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설립 목적과 비전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주요 사업 분야

1. 소상공인 성장 지원

창업에서 경영 안정, 성장 단계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창업 단계에서는 시장 분석과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소상공인365' 운영을 비롯해 창업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경영 및 성장 단계에서는 경영개선 컨설팅, 스마트 기술 보급, 온라인·해외 판로 개척 등을 통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 정책자금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과 성장 기반을 조성해 자생력을 높이고, 생업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을 통해 용자를 지원한다.

3.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전통시장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문화관광형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등으로 전통시장의 고유한 매력을 살리면서 소비자 유입을 촉진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를 통해 화재·재해 예방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발행·관리와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을 통해 소비 촉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4. 재기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

폐업 또는 위기 소상공인을 위해 원스톱 폐업 지원, 취업 지원, 재창업 교육 등을 아우르는 '희망리턴패키지'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그림 2 소상공인365 내 상권 분석 화면



자료: 소상공인365 홈페이지(<https://bigdata.sbiz.or.kr>)

소상공인365

‘소상공인365’는 창업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공공·민간 데이터를 융합해 상권 분석, 경영진단, 정책 정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요 제공 서비스에는 빅데이터 상권 분석, 내 가게 경영진단, 상권·시장 핫트렌드 등이 있다.

빅데이터 상권 분석은 창업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입지 선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업종별 유동 인구, 매출 현황, 고객 특성, 배달 매출 현황 등을 분석 리포트 형태로 제공한다.

내 가게 경영진단은 소상공인 개별 점포의 경쟁 상태, 생존 가능성, 성장 전망을 분석해 제공한다. 또한 주변 상권 정보를 바탕으로 점포 운영 상태를 진단하며 인기 메뉴, 시간대별 유동 인구 데이터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소상공인들이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함께 만드는 전통시장

1. 어린이 전통시장 체험 사업

교육청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함께하는 ‘어린이 전통시장 체험 사업’은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장보기 체험과 함께 연령별 교안 개발 등 실물경제 연계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이다. 2022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기준 누적 약 56만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방문해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미래 고객을 창출하고 있다.

2.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 구축

전통시장 화재 출동 시 초기 진화 지연에 관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와 협업을 진행해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을 구축했다.

전통시장 골목 내 위험 요소를 사전에 데이터화하고, 긴급 출동 시 경로와 현장 정보를 자동 제공해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 2024년 5월, 대전 중구 태평전통시장에서 개최한 어린이 전통시장 체험 행사(사진출처: 필자)



▶ 2025년 6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와 함께 실시한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 시범사업(사진출처: 필자)



채용정보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한국철도공사(KORAIL)는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책임지는 우리나라 대표 철도 공기업입니다. KTX와 일반·화물열차, 광역전철을 운영하며, 철도 시설관리와 신기술 연구·개발, 해외 협력사업 등 철도산업 전반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지역 균형발전·교통복지 실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철도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채용의 특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철도공사는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출신학교, 지역, 나이, 성별 등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필요한 정보를 배제하고, 스펙이 아닌 직무역량 중심으로 공정하게 인재를 선발합니다. 채용 분야는 7개 직무(사무영업, 열차승무, 운전, 차량, 토목, 건축, 전기통신)이며,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으로 세분화해 채용을 실시합니다. 6급 신입사원 채용 기준으로 서류 전형 → 필기시험 → 실기시험(해당 분야) →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이원석
한국철도공사
인재경영본부 차장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을 알려주세요.

입사지원서에 지원 자격과 우대 사항(자격증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정확한 검증을 위해 지원 자격, 우대사항 진위 여부를 발급기관에 조회하고 있으며, 착오·오기재로 인해 진위 여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경험을 단순히 나열하는 대신, '상황 → 행동 → 결과 → 배운 점' 구조로 풀어내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코레일 인재상(사람지향 소통인, 고객지향 전문인, 미래지향 혁신인)과 연결해 지원자의 강점을 보여주세요. 특히, 공고문상의 '블라인드 채용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위배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필기·면접 전형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필기시험은 NCS, 전공, 철도법령으로 구성됩니다. NCS는 기출·모의문제를 통해 시간관리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세요. 전공시험은 직무 관련 기본 지식을 충실히 학습하시고, 철도법령은 핵심 조항을 반복 학습하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면접시험은 NCS 기반 직무경험 및 상황면접 등을 중심으로 지원자의 역량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직무경험면접은 지원자의 과거 경험을 토대로 답변하는 방식이며, 상황면접은 실제 업무 상황을 가정한 질문에 논리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본 태도와 코레일 인재상에 부합하는 지원자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차분한 태도와 명확한 답변은 면접관에게 신뢰감을 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채용 담당자로서 입사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철도는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산업 분야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직원은 단순히 근로자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편리한 이동을 책임지는 동반자입니다. 취업 준비 과정이 길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쌓여 결국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집니다. “내가 왜 한국철도공사에 꼭 필요한 인재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는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국민과 미래를 잇는 길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한국철도공사 인재상



사람 중심의 사고와 행동을 하는 인성, 열린 마인드로 주변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사람지향 소통인**



고객만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노력하는 **고객지향 전문인**



한국 철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의 발전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미래지향 혁신인**



현직자
인터뷰

철도공사에서 일한다는 것



한승희 한국철도공사 여객마케팅처 대리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철도공사 여객마케팅처에서 근무 중인 한승희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입사 후 광명역에서 2년간 역무원으로 근무하고, 지난해 7월부터 대전 본사 여객마케팅처에서 여객제도 업무 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현재 담당하고 계신 직무는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여객마케팅처에서 여객운송 약관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도와 규정을 검토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부정승차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합니다. 정당하게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악용 사례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열차와 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고객 요구를 반영해 제도가 현실에 맞게 운영되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대학 시절,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3박 4일 동안 러시아를 횡단한 경험이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열차 안에서 지내

면서 철도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사람들의 생활을 연결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이 계기가 되어 철도에 관심과 애정이 생겼고, 자연스럽게 한국철도공사에서 일하며 철도를 더 많은 사람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고 싶다는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는 현장 역무원, 본사·본부 스태프 등 다양한 직무 경험이 가능한 만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까지 다뤄볼 수 있다는 점이 제 성향과 잘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취업 준비할 때 가장 도움 됐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취업 준비 과정에서 인턴 경험이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차례 인턴을 통해 기차역과 지하철역의 업무를 모두 경험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현장을 더욱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실제 면접에서 상황 질문에 대응할 때 큰 힘이 됐고, 인턴 당시 인연을 맺은 선배들과 입사 후에도 교류하면서 업무와 조직문화를 빠르게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 되었습니다.

본인 직무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소개해 주세요.

담당하는 업무가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소통 능력과 추진력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이용자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빨리 정해진 방향으로 개선 사항을 반영해 국민이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담당 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좋은 점은 성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규정을 개정하면 언론 보도나 고객 반응을 통해 파급력을 실시간으로 체감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큰 성취감을 느낍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모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기 어렵다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최대한 많은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느끼면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입사 1~2년 차 시절 가장 보람 있거나 인상 깊은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광명역 근무 시절, 열차 출발 직후 외국인 승객이 객차에 매달린 위험한 상황을 발견하고 즉시 열차를 정지시켜 사고를 예방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으로 철도의 최우선 가치가 '안전'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작은 위험 신호도 놓치지 않기 위해 습관적으로 점검하는 태도가 몸에 배었고, 업무를 꼼꼼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입사 이후 회사 생활과 경험을 비추어볼 때, 입사 전 생각했던 사항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입사 전에는 맡은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막연한 불안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사에 보니 선배들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신입사원을 돕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각자 맡은 일로 바쁜 상황에서도 후배를 위해 비결을 공유하고 실무를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모습에서 따뜻한 조직문화를 느꼈습니다. 덕분에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고, 저 역시 후배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선배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를 포함한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꿀팁을 전수해 주세요.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체력이 뒷받침되면 더 많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집중이 잘되지 않는 아침 시간에 새벽 수영을 다니면서 체력도 기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 준비는 장기전인 만큼 자기관리를 꾸준히 했으면 합니다.

입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취업 준비가 길어지다 보면 지치고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있지만 앞으로 일할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이뤘더라도 준비하며 가졌던 간절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듯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되니 힘내세요!○





채용정보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개발공사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바다를 땅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신(新) 영토를 개척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선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적극 확대해 새만금을 'RE100 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또한 제2국가산업단지과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을 통해 사람과 기업이 함께하는 공간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관광과 레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도 추진 중입니다. 복합리조트, 스포츠 콤플렉스 등 새만금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종합하면, 건국 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조성한 새만금 부지를 산업과 사람, 문화가 하나 되는 수변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매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 채용의 특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입직 채용을 기준으로 서류 전형, 필기시험, 실무 면접, 심층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류 전형은 30배수를 선정하며 자기소개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필기시험은 직업기초능력 평가 50%, 전공 필기 50%로, 5배수를 선정합니다. 실무 면접은 발표 면접으로, 직무 상황과 지식 관련 주제 제시 후 이에 대한 발표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3배수를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1배수를 선정하는 심층 면접은 인성과 가치관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공사는 100%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며 어학이나 학력 등 어떠한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창사 이래 단 한 건의 공정채용 절차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고, 6년 연속 공정채용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습니다.



김강우

새만금개발공사 기획본부
인사노무팀 팀장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을 알려주세요.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는 철저히 면접관 또는 서류 심사자 입장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제한된 시간에 많은 분량을 보고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글의 형식과 이에 따른 가독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 드리자면 우선 한 질문의 답변을 총괄하는 매력 있는 소재목 선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락 구분이 중요합니다. 단락 구분 없이 나열식으로 구성한 경우, 독자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를 활용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동일한 내용이 여러 지원자에게 중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성실성이나 정직성에서 큰 감점이 되므로 직접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시는 참고자료 정도로만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

필기 · 면접 전형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필기는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전공 필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NCS는 타 공기업과 동일하게 시중에 있는 자료로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전공 필기의 경우, 행정, 토목, 건축, 전기, 전산 등 직렬별로 다르긴 하나 주요 직렬인 행정과 토목을 중심으로 보면 행정은 경영학원론, 마케팅 등 경영학 중심의 준비를 하면 좋습니다. 토목은 응용역학, 측량학 등을 중심으로 출제합니다. 전공 필기 분야는 기관별로 출제 분야와 출제 방식이 다른 만큼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 보시고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채용 담당자로서 입사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 · 30대 지원자들을 보면 무엇보다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대한민국 5천년 역사 중 유일하게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라고 하는데, 그 힘듦과 무게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가중될 듯해 세 아이 아빠이자 기성세대가 되어 가는 40대인 저는 걱정과 염려가 교차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열린 채용, 더 넓은 기회를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현직자
인터뷰

새만금의 내일을 그리며, 모두의 꿈을 응원합니다



김도경 새만금개발공사 투자사업처 과장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새만금개발공사 투자사업처에 근무 중인 김도경 과장입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전북 새만금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저는 2019년부터 약 5년간 인재경영처에서 근무하며 임직원 보수와 복리후생을 관리했고, 2024년부터는 현 부서에서 대외 투자유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에서 현재 담당하고 계신 직무는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저는 투자사업처에서도 투자유치팀에 근무 중입니다. 발품을 팔며 새만금에 크고 작은 투자를 성사시키는 일이 주 업무입니다. 현재는 공사 핵심 사업인 수변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후속 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앵커시설 위주로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외 기관의 관심을 유도하고, 정책적 인센티브와 입지 여건 등을 설명하며 새만금에 실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제가 공사에 지원한 2019년 당시 새만금은 백지와도 같은

상황이었는데,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하며 변화하는 모습을 요즘 말로 '직관'할 수 있겠다는 생각, 그래서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원했습니다.

취업 준비할 때 가장 도움 됐던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취업 전 공공기관 인턴 경험이 가장 도움 됐습니다. 6개월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이는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에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면접에서 답변 내용을 꾸며낼 필요 없이, 실제 경험하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좋은 답변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 직무에서 일하기 데 필요한 역량을 소개해 주세요.

'잘 말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투자유치'라는 업무 특성상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을 만났고, 그중에는 성공적인 미팅도,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하면서 투자유치의 성공 여부는 '신뢰'에서 갈린다는 배움을 얻었습니다. 정직함과 일관성을 지니고 대화했을 때 좋은 결과로 발전했습니다. 결국 투자유치 업무에서 '잘 말하는 능력'이란 나의 말을 상대가 신뢰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담당 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좋은 점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유치 업무 특성상 평소 가보지 못했던 곳을 가고,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같은 곳을 가더라도 일반인 신분으로 갈 때와 회사를 등에 업고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방문했을 때 얻는 경험이 다릅니다. 이 업무를 하며 식견을 많이 넓혀가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사람이 새만금과 수변도시를 생소해해서 업무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변도시도 현재 개발 진행



단계이기 때문에 계획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투자유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끌어 내는 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입사 1~2년 차 시절 가장 보람 있거나 인상 깊은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입사 1년 차 국정감사 관련 자료 준비 중 크게 실수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국회에 가서 혼나기도 했고, 이후에는 기관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질 만큼 큰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신입 사원은 실수할 수 있다며 공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자분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큰 징계를 받을까 걱정이 많았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참 따뜻하다고 느꼈고, 이후에는 외부에 자료를 제출할 때 철저하게 검토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저를 성장하게 해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못다 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입사 이후 회사 생활과 경험을 비추어볼 때, 입사 전 생각했던 사항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행정 직무로 입사했기 때문에 주로 사무실에 앉아 일할 줄 알았습니다. 과거 한동안은 그랬었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에는 순환근무 제도가 있고, 덕분에 현재는 투자유치를 위해 전국 팔도를 향해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순환근무 제도가 장단점이 있지만 여러 직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새만금개발공사에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꿈은 무엇인가요?

새만금 수변도시 성공에 일조해서 나중에 “내가 만든 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새만금 수변도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새만금개발공사를 포함한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꿀팁을 전수해 주세요.

내가 갈 기업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글에 비유하자면,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법과 면접 답변 잘하는 법을 공부하는 것은 글씨 쓰는 법을 연습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분석하는 것이 글을 쓰는 연습이라 생각합니다. 취업에서 중요한 점은 글씨보다 내용입니다. 글을 어떤 내용으로 채워야 좋은 글이 될지 생각하며, 자신을 분석하고 준비하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입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인재경영처에서 한동안 근무했다 보니 취업시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채용마다 누군가는 분명히 입사해서 설레는 얼굴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개 “운이 좋아 입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아직 기회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회를 잡았을 때 “운이 따랐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새만금도 그 ‘운’을 기다리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가능성과 미래를 이야기하며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언젠가 그 기회가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새만금에도, 또 이 글을 읽는 후배님들에게도 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글은 '2024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 당선작 중 장애인 채용 부문의 작품을 전제한 것입니다.

39전 40기

나의 할머니

나는 태어나면서 황달과 경기로 인해 뇌 병변 장애를 갖게 됐다. 가정 출산으로 집에만 있었고 종일 잠만 자던 나의 이상을 가족들이 감지하고 병원에 데려갔을 때, 의사의 말은 가족들을 절망에 빠뜨렸다. “아기는 아마 평생 못 걸을 겁니다. 앓을 수만 있어도 기적이예요. 너무 늦게 왔습니다.”

나의 장애로 인해 가정의 균형은 무너져 부모님은 이혼하셨다. 아버지는 친할머니 손에 나를 맡기고 외화벌이를 위해 외국으로 가셨다. 할머니는 당신의 큰 손자가 앉아서 밥을 먹고 더디게나마 걸을 수 있게 하고자 노력하셨다. 내가 4살 때부터 할머니는 날 업고 물리치료와 침술치료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2년간 다니셨다. 어릴 적이라 기억은 안 나지만 온 관절을 비틀어대던 물리치료가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던 기억은 남아 있다.

그 치료 덕분이었을까? 아니면 포기하지 않던 할머니 정성에 하늘이 감복해서였을까? 난 혼자 앓을 수 있었고 설 수 있었다. 그리고 더디게나마 걸을 수 있게 됐다. 5살 때였다. 나이지는 내 모습에 할머니는 점점 더 과감한 도전을 하셨다. 동네 작은 교회 부설 유치원에 나를 입학시켰다. 할머니의 도전은 성공적이었다. 내가 또래들보다 우수한 학습 능력을 보이며 친구들과도 잘 지내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입학은 또 다른 문제였다. 내 장애를 이유로 집 앞 초등학교에서 입학을 불허했다. 이에 할머니는 “내 손주가 다른 친구들보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거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그때 특수학교에 보내겠으니 딱 1개월만 지켜봐 주십시오.”라며 교장선생님을 설득했고, 그렇게 조건부 입학할 수 있었다. 이후 난 계속 일반학교에서 비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지냈다. 돌이켜 보면, 그때 할머니께서 다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했다면, 지금 난 어찌 되었을까 상상해 보곤 한다. 상상이지만 너무 암울한 그림이 그려진다.

나의 직업

친구들과 어울리며 놀고 공부하며 나의 학창 시절은 보통의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흘러갔고, 수능을 보고 행정학과에 입학했다. 고등학교 3년간 규율에 얽매며 지내다 대학에 진학하니 급작스러운 자유로움에 방탕함이 물들어 목표로 하던 공무원은 고사하고 졸업도 어려울 정도로 안 일하게 대학 생활을 했다.

당시, 공무원 시험은 부모의 지원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난 그런 지원을 바랄 형편이 아니었다. 성인이 된 내게 아버지는 독립을 하라며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겠다 하셨고 연로하신 할머니께 기댈 수도 없었다. 1학년 때부터 혼자 살면서 방학에는 용돈이 없어 아르바이트하며 지냈다. 4학년 때는 도서관 근로장학



박연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인증센터 대리

생으로 용돈벌이를 했고, 졸업 후에는 공공근로를 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취업을 고민하던 중 사회복지사가 눈에 들어왔다. 대학 진학도 사회복지학과로 가고 싶었지만, 공무원이라는 목표를 위해 행정학과로 진학한 터였다. 아무튼, 사이버대학 1년 과정을 마치면 사회복지사 취득이 가능하기에 아버지께 사정해 학비를 지원받아 2급을 취득했고, 1년 후에 사회복지사 1급도 시험을 치러 취득했다. 이때, 운전면허와 사무자동화산업기사도 취득했다. 하지만 여전히 취업은 난공불락이었다. 복지기관 200여 군데에 이력서를 넣고 10여 군데 면접을 본 후, 겨우 작은 장애인단체에 입사하며 나이 서른에 처음으로 그럴듯한 직업을 가질 수 있었다. 그곳에서 2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일을 하다 기관 사정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3개월간 쉬다 온 좋게 새로 개관한 장애인복지관에 입사했다. 처음에는 시각장애인 도서관에 배치되어 도서 대출을 비롯해, 대체도서를 제작하고 관련 봉사자들을 교육하는 업무를 맡아 즐겁게 일했다. 그러다 지역복지팀으로 이동해 재가장애인 프로그램, 가정방문 및 사례 관리, 동아리, 목욕, 자원봉사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맡았다. 복지관에서 5년 동안 근무하며 야근은 물론, 철야 업무도 하는 등 누구보다 열심히 근무했다고 자부한다. 그러다 만 5년이 되던 12월 어느 날, 관장님이 호출하셨다. 재단의 다른 산하 시설로 옮겨 근무할 생각이 있냐는 제안을 빙자한 명령이었다. 이미 결론을 낸 관장님의 의지를 보았기에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난 새로운 곳에서 또 다른 6년을 시작한다.

불혹, 나의 또 다른 도전

새로운 곳도 장애인 관련 업무를 진행하던 기관이었고 잘 적응하려 했으나, 역시 어려웠다. 여기서 기술하긴

어려우나 여러 문제가 있었고 내 의지에 의한 이동이 아니기에 정도 들지 않았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의미 없게 살아야 하나? 여기서 더 있어 봤자 호봉만 오르고 승진은 안 될 것이 뻔한데, 예산 잡아먹는 하마가 될 것인가?

그때,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내게 “공기업 알아봐. 장애인 채용 꽤 있던데?”라고 제안해 줘서 공기업 취업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으로 장애인 채용은 비록 소수지만 끊임없이 공고가 게시됐다. 가산점이 될 만한 자격증을 조사하고 채용 직무의 종류와 필기시험 과목을 알아봤다.

일단 가산점이 될 만한 자격증 중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목표로 삼았다. 문제집 2권을 구입해 퇴근 후, 집 근처 시립도서관에서 매일 2시간을 풀었다. 1개월간 공부해서 한국사능력검정 1급을 취득했다. 2단계는 취업 사이트에 메일링 서비스 신청하기. 취업사이트의 메일링 서비스는 자신이 원하는 키워드나 직무 등을 정하여 관련 채용 공고가 나오면 메일로 보내 주는 서비스로, 일 2~3회 정도 메일이 송부되므로 메일을 보고 지원 가능한 채용이 있으면 지원하면 되기에 일일이 공고를 찾아보는 수고를 덜 수 있었다. 3단계, NCS와 전공시험 준비하기. NCS 문제집을 사서 한국사 자격증 때처럼 공부를 시작했고, 추가로 행정학이나 경영학을 전공시험의 기준으로 삼아 공부했다. 매일 주경야독하고 주말 이틀 중 하루는 도서관에 갔다. 이런 준비 끝에 지원서를 처음 작성한 때가 내 나이 39세였다. 그렇게 지원하는 횟수는 10군데, 15군데, 17군데... 매년 점점 늘어만 갔다.

초반엔 지원서에서 탈락할 때도 많았지만 갈수록 합격하는 횟수가 늘었고, 필기시험의 기회도 늘었다. 필기시험도 초반 2년간 합격률은 반타작을 못 넘었지만, 문

제접을 많이 풀면서 점차 실력이 쌓여 최종 80%를 넘게 됐다. 마지막은 최종 면접. 제목에서 보듯 공기업 면접을 40회 이상 봤다. 면접에 총 6회 도전한 기관도 있다.

면접 본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이었지만 강원도와 대전 등 지방도 있었다. 면접 준비를 위해 인터넷 검색은 물론, 유튜브 면접 관련 영상 시청, 유료 기업 리뷰 사이트 등을 통해 기출 면접 유형을 찾고 예상 질문을 유추해 대본 만드는 작업을 했다.

원서 작성, 필기 공부, 면접 준비를 하며 근무하다 보니 피로가 누적되고 심적으로도 어려움이 오게 되어 기관 이동 만 5년 만에 퇴사하며 사회복지사 13년 경력을 접었다. 무모할 수도 있었지만, 약 18개월간 공기업 취업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면접 기회는 늘었다. 그러나 연이은 탈락에 자존감은 바닥을 뚫을 기세였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10여 군데 면접을 진행했다. 상반기에 결정이 안 되면 다시 사회복지사로 돌아갈 생각이었고, 돌아가더라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다고 만족할 수 있었다.

경험치가 쌓이는 경험은 게임에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면접도 그랬다. 올해 본 면접에서 단번에 합격하지는 못했으나 예비 합격 횟수와 순위가 상승했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서 2번째로 본 한국사회복지기업진흥원이 예비 합격 1순위였다. '역시 안되나? 다시 돌아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추가 합격했다. 나이 많은 신입인 만큼 요령 피우지 않고 누구보다 성실히 업무를 보고 있고 시보 평가도 잘 통과해 정직원이 됐다. 합격 후, 근무하던 복지관과 기관에 찾아가 친하던 동료들에게 밥도 사고 부서별로 간식을 선물하기도 했다. 현재 내 나이 44세이다.

다수의 필기와 면접을 보며 아쉬웠던 점이 2가지 정도

있다. 먼저 필기에서는 장애인 채용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난 실제 장애는 뇌 병변이고 목디스크로 인해 필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등록 장애는 하지 장애 지체로 되어 있다. 장애 등록 당시, 난 잘 걷지 못했고 뇌 병변이 장애의 종류가 아니었다. 지금 다시 장애 등급을 받으면 걷는다는 이유로 등급은 떨어지고 시일도 매우 오래 걸리기에 재판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서 뇌 병변 편의 제공을 받았다. 하지만 몇몇 시험에서는 장애인증명서에 의해서만 편의를 제공한다며 아무 편의 제공이 없던 고사장도 있었다. 장애인도 나이를 먹을수록 불편한 곳이 달라질 수도,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에 장애인증명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검토를 통해 편의 제공을 검토했으면 한다.

공고상 사무직을 채용한다고 해서 어렵게 면접까지 갔지만, 전화상담 업무가 주를 이룬다며 면접에서 탈락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뇌 병변 장애에 언어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전화 업무가 많을 때는 채용 공고에 '언어 장애가 있으면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었다면 지원을 심사숙고해서 수고를 덜 했을 것이다.

난 그간 내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조금 더 나아지고자 노력 중이며, 이러한 근성은 할머니께 물려받은 듯하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장애가 있건 비장애인이건 나이가 얼마든 상관없다. 사소하더라도 목표가 생겼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길 바란다. 우리 오늘이 제일 젊고 새롭게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 또한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길 바란다. 마냥 좋지도 마냥 나쁘지만 하지도 않은 것이 인생이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 바라던 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2024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 당선작 중 장애인 채용 부문의 작품을 전제한 것입니다.

신입사원이 미래 후배에게 전하는 작은 격려

장애는 가난을 동반한다. 모든 장애인 가정이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은 가족 구성원의 장애가 가족 전체의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불행히도 우리 가족은 그 대부분에 속했다.

내 병간호를 위해 어머니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병원에 상주해 계셨고, 인공호흡기가 내게 숨을 불어넣을 때마다 쌓여가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우리 가족은 살던 집을 팔고 시골로 이사를 가야 했다. 자연스럽게 아버지도 다니던 직장을 버리고 시골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다.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했던 부모님의 귀향은 사실 '귀양'에 가까웠다.

가족이 서서히 무너져 가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버티기엔 초등학교는 너무 어려웠다. 가끔은 나를 찢던 자동차가 조금 더 세계 치지 못했음을 원망했고, 그날 초록불인 보행자 신호등을 내가 색맹이라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까 자책하는 긴 시간이 지나갔다. 전교생이 7명 남짓인 시골 초등학교는 휠체어로 이동하는 나를 위해 학교 시설을 개조하고 학용품을 제공해 주는 등 많은 지원을 해줬다. 또한 친구들은 편견 없이 나를 대하며 휠체어를 밀고 들판과 계곡을 구경시켜줬다. 삶에 감사하다는 느낌을 처음 받았을 때

가 이때쯤인 듯하다.

가족의 희생, 주변 사람들의 배려, 그리고 지역 사회의 도움으로 나는 무탈하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남들보다 집에 조용히 누워 있는 시간이 많았던 탓에 독서에 취미를 붙였고, 공부에 소질이 전혀 없진 않아 고등학교 기간 내내 전교 1등을 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국립대학교라 등록금이 저렴한 서울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 최종 도착지일 수도 있는 명문대 진학이지만 나에게서는 돈을 벌기 위해 거쳐 가는 과정일 뿐이었다. 우리 가족의 생계는 크게 나아진 것이 없었다. 여전히 나라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했고 대학교 등록금도 지역사회 장학금이 없었다면 내지 못할 정도였다. 한 학기라도 장학금을 놓치면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기에 대학교 캠퍼스의 낭만을 느낄 새 없이 강의실과 도서관을 반복하는 삶을 살았다. 어느덧 졸업생이 된 나는 나를 기다리는 것이 어미일지 포식자일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겁질을 깨고 나와야 하는 병아리 같은 신세였다.

장애인에게 직업이 주는 의미는 단순한 생계유지 수단 이상이다. 가족, 지역사회, 국가의 도움으로 간신히 버티는 의존적인 상황에서 진정한 자립으로 향하는 발판이다. 그렇기에 그 벽은



박근원
한국마사회
승마활성화부 사원



더욱 높게 느껴졌다. 경험을 쌓기 위해 지원한 대기업 인턴은 매년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하지 못했다. 간혹 지원할 수 있었던 공공기관 인턴은 '체험형'이라는 꼬리표가 달렸고, 정규직 일자리는 손에 닿을 듯 잡히지 않는 채로 시간이 흘렀다. 늘 사회에서 도움을 받아 감사함을 되새기며 살았지만 장애인 취준생으로서 겪은 사회는 너무나 냉혹했다.

시간이 흘러 블라인드 채용으로의 전환, 제한경쟁으로 장애인 채용을 실시하는 기관이 늘어나면서 내게도 기회가 주어졌다. 한국마사회에서 제한경쟁 장애인 채용을 실시한다는 공고문을 확인했다. 이전부터 공기업으로서 한국마사회의 명성을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곧바로 채용 준비를 시작했다.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기도 하고, 채용 예정 인원이 1명뿐이라서 내가 붙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은 없었지만, 내겐 간절한 기회였기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장애가 있는 취준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며 느끼는 공통된 감정은 무력감일 듯하다. 서류-필기-심층 면접-최종 면접의 단계를 모두 거치는 동안 내 장애가 한 번쯤은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어차피 정규직으로 채용될 일 없으니 체험형 인턴으로라도 만족한다는 체념이다. 장애와 가난의 고통을 모두 겪으면서 이 무력감이 얼마나 큰 걸림돌인지 깊이 공감한다. 무력감이 습관이 되면 작은 성공에 안주하려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달릴 수 있음에도 걷게 되는 상황이 지속된다. 그 틀을 깨는 것이 힘들지만 분명 도전할 가치가 있다.

NCS 문제집과 전공 과목 개론을 사서 열심히 공부

하며 서류 심사와 필기 심사를 통과했다. 심층 면접의 경우 토론 면접과 상황 면접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주어지는 질문들은 쉽지 않았던 기억이 난다.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이라고 해서 선심 쓰듯 혹은 고용의무를 채우기 위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면접 대상자의 직무 능력을 평가하여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선별하고자 전문적인 준비를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최종 면접은 자기소개서 기반 면접이었는데, 최종 면접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대학교 입학 당시와 흡사했다.

한국마사회 입사 후 나는 재활승마 관련 업무를 맡게 됐다. 재활승마란 장애인들이 말(馬)을 통한 기승·비기승 활동으로 신체 및 정서적 치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말 매개 활동의 하나이다. 장애인으로서 채용된 내가 장애인을 위한 사업 담당자가 될 수 있어 자연스레 동기 부여가 되었고, 사업으로 느끼는 성취감도 다른 사람에 비해 크다고 생각한다. 채용뿐만 아니라 나의 상황을 고려해 부서 배치까지 신경을 써준 인사부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또한 장애인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최저임금 적용에도 예외가 되는 등 한국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처우가 좋지 않은 편임을 고려할 때 일반 정규직으로 채용을 진행한 한국마사회의 진심에 감동했다.

나 역시 장애인이기엔 장애를 지닌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존경심이 있다. 그중에서도 적극적인 자립을 위해 혹은 더 큰 꿈을 위해 취업에 도전하는 수많은 장애인에게 격려를 보내고 싶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하는지 막막하고, 사회는 같은

결과를 내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내 처지를 알아 주지 못한다고 느껴 답답할 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 합격 수기를 작성하는 많은 장애인은 나름의 노력으로 원하던 직장에 취업했고 그 꿈을 후배들에게 공유하고자 한다. 장애인에 대한 회사의 문은 점점 넓어지고 있고, 채용 기회도 다양해지고 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비관하기보다 제한경쟁의 문을 활

용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장애를 얻은 이후 나는 항상 도움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내 경험을 공유하여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가 된다면 그동안 받기만 한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막 신입사원이 된 내가 후배가 될 또 다른 신입사원들에게 따뜻한 박수를 간절히 보내고 싶은 이유다.◎



2025년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합니다!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세요!

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단독 138만 원, 부부 220.8만 원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월 최대 432,510원

장애수당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수당 지급금액

월 6만 원

※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월 3만 원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 포함
(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장애아동수당 지급금액

월 11~22만 원

※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3~9만 원

신청 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 신청자의 신분증, 본인명의로 통장사본
 - 대리신청 가능(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지참)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처

-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 없이 129**
-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논문 모집

공공기관과 정책연구 Public Institutions and Policy Review

공공기관과 정책연구는 공공기관에 관한 이론적·정책적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 연구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논문 투고 안내

논문모집 공고는 매년 1월, 6월 중 게시

세부사항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www.kipf.re.kr/soe/)

기고분야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의 정부정책(기능·사업)과 운영(지배구조·인사·조직·재무
회계·평가) 등에 관련한 연구 분야

기고자 자격 및 원고 작성 방법

기고 자격 : 제한 없음

원고 매수 :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A4 15매 내외)

편집 양식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공지사항 내 논문모집공고 확인
(www.kipf.re.kr/soe/)

* 별도의 심사료, 게재료 없음

논문 발간일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연 2회 발간)

기고 방법 및 원고료

pipr@kipf.re.kr 메일로 기한 내 논문 기고 및 문의
게재 논문에 대해 편당 200만원 원고료 지급

문의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Tel : 044-414-2433, E-mail : pipr@kipf.re.kr

모두의 예방접종이 질병을 이길 병으로

날씨가 추워지면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코로나19와 동시접종으로 함께 예방하세요!



대상 65세 이상 (1960. 12. 31. 이전 출생자)

기관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보건소 방문 전 확인 필수)

기간

- 75세 이상 | 2025. 10. 15.(수) ~ 2026. 4. 30.(목)
- 70~74세 | 2025. 10. 20.(월) ~ 2026. 4. 30.(목)
- 65~69세 | 2025. 10. 22.(수) ~ 2026. 4. 30.(목)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건강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 하기



보호자와 접종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접종 후 현장에서
20~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